

신시대 한일협력 7대 핵심과제

2013년 12월 24일

제2기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목차

| | |
|------------------------------|-----|
| 머리말 | 1 |
| 요약 | 3 |
| 본문 | |
| Ⅰ.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 14 |
| Ⅱ.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 24 |
| Ⅲ. 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건축 | 37 |
| Ⅳ.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 49 |
| Ⅴ. 환경협력 | 62 |
| Ⅵ. 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건축 | 84 |
| Ⅶ. 복합 공생 기술협력 | 99 |
|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 명단 | 111 |

머리말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보고서가 2010년 10월 제출된 후 3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2기 위원회는 2011년 12월 첫 전체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고, 2013년 2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최종 보고회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전체 회의와 네 차례의 분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들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제 2기 위원회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1기 위원회는 한일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라고 정의하고, “과거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미래를 공동 설계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유기적이고도 연속적으로 이해”하여 “한일 양국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한 질서를 복안적(複眼的)으로 전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미래지향적 관계 속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 2기 위원회는 신시대 한일협력을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7대 분야는 ①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②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③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건축, ④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⑤환경협력, ⑥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건축, 그리고 ⑦복합 공생 기술협력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남짓이었지만 그 동안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유럽의 신용 불안에 이어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의 대홍수가 있었고, 201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전개되는 한편, 한일 관계도 적지 않은 긴장을 겪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이후, 북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2012년 말에는 북한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었고 2013년 2월에는 핵무기의 소형화 실험도 단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의 재편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 태국의 대홍수, 중국의 반일 시위에 의해 촉진되고, 또한 일본의 경제환경, 즉 엔고(円高), 높은 법인세율, 전력문제, 경제 자유화의 지연 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일본 기업이 고성능 소재나 부품의 생산·개발 거점을 한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은 산업구조를 접근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야흐로 국경을 넘은 산업 내의 수평분업을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1기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일의 ‘복합공생 네트워크’는 먼저 경제 분야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국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함께 한일 관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육성하고, 군사력의 확대를 일정 한도 내로 억제하고, 동아시아 세계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함과 동시에, 나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군사도발을 억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한일 양국은 아시아 국가인 동시에 태평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일의 세계사적인 역할은 미중 대립을 완화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의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개의 세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세대를 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자신이 건전한 정치경제 체제를 지닌 선진적인 평화 국가로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체제, 산업구조 그리고 지정학적인 조건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이를 위해 협력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는 한일의 협력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기 위원회 보고서가 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기 위원회와 같이, 제2기 위원회의 활동도 한일 양국 정부,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일한문화교류기금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는 점을 명기함과 동시에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위원장

일한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위원장

하영선

오코노기 마사오

요약

한일신시대의 7대 핵심과제

한일 양국이 맞이하는 21세기 신시대는 냉전시기의 양극화나 탈냉전 시기의 다극화 시대가 아닌 복합화의 시대이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신시대 한일 관계에는, 중국의 급속한 대국화와 동아시아경제의 현저한 확대를 배경으로, 한일 양국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전 분야에 걸친 전면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신시대 복합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국익 경쟁이나 세력균형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서 보다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중일의 우호협력 관계와도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한일협력의 심화야말로 점차 도래하고 있는 미중 양강 시대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즉, 한일 관계의 심화·발전은 대미, 대중 관계의 강화와 선순환 관계에 있으며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 한일 신시대는 한일협력의 방향을 기존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자는 물론이고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한일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일 신시대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미래의 한일 관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확장된 공간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신시대의 협력은 한일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 동아시아 지역 차원, 글로벌 영역의 네 공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한일 신시대는 정치, 안보보장, 경제문제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21세기와 함께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술 분야의 한일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협력의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대학을 비롯한 지식계, 기업과 지방자치체 등의 전 방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한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공생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서서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7대 핵심과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한국과 일본은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보다 증진시키고 이를 동아시아 각국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인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는 인식공동체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5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식-학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식뱅크'의 구축 및 확산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역사, 사상, 문화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상에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정부 및 민간레벨의 공동연구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및 글로벌한 공통의 과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토록 한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 공동의 '아시아문화 창작촌' 건설을 제안한다. 즉, 한국과 일본의 문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구상을 공유하고 공동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창작촌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 소재한 한국문화원과 일본문화원, 혹은 유학생들을 매개로 공동으로 세계를 향해 문화를 발신하는 협력을 보다 활성화한다.

셋째, 한일 간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위해 한일 공동의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양국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등에 의한 공동의 학술조사와 공동전시 활성화 및 상대국 방문자에 대한 특별우대 제도와 공동 관람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넷째, 한일 미디어 분야의 협력을 위해 '한일 미디어 포럼'을 창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상대 국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언론 및 출판 경향의 자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출판 분야에서는 한국, 일본, 나아가 중국이 공유해야 할 윤리, 사상, 역사, 문화에 대한 고전적 작품의 지속적 번역 출판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일 간 미디어를 통한 문화 공유를 위해 동아시아판 아르테(ARTE)의 창설을 추진한다. 즉, 상대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성 높은 고급문화를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문화, 예술, 교양 전문 TV 채널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기본개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 인적 교류의 특징 및 과제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5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지도자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위해 ‘한일 2040 포럼’의 창설을 제안한다. 이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각계각층의 젊은 지도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기적인 지적 교류의 틀이 될 것이다. 또한 ‘한일 차세대 정치지도자 포럼’을 창설하여 양국의 젊은 정치인들이 한일이 당면한 현안은 물론이고 지구적 규모의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둘째, 한일 양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10만 명 유학생 프로젝트’의 실시를 제안한다. 이는 향후 5년간 한일 간 유학생의 획기적인 상호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일대학 간 컨소시엄’ 제도를 도입하여 한일 양국의 대학들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현해탄을 오가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일 공동 국제공무원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의 국제공헌에 대한 관심을 공유함과 더불어 해외에 파견할 국제공무원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육성·공급할 것을 검토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해양크루즈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청소년이 주변국을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미래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에 틀림없다. 즉, 한국, 일본, 중국의 교육단체와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크루즈 선을 이용한 한국의 인천·부산, 일본의 후쿠오카·오사카, 중국의 대련·상해 등을 잇는 해양 항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지방 중심의 대규모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기존의 서울-도쿄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해 온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한일 관계를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모습으로 교류 네트워크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후쿠오카의 경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실시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노력을 환영하며, 학생교류 프로젝트인 ‘한일해협권칼리지’의 확대를 기대한다.

다섯째, 한일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국민의 출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도 한

일 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유럽연합가맹국 간의 출입국 수속 간소화를 본받아 ‘한일관광패스(KJ/JK Tourism Pass)’ 제도를 도입하여 한일 국민들은 출입국장에 설치된 특별통로에서 패스를 출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구축

안보 분야에서 한일 공동의 전략비전은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지역 전체의 상생을 위한 아키텍처의 구축이며 이는 지역 복합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향후 동아시아에 대한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을 축으로 한 동맹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미중 간의 각축에서 양자 간의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증강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과 범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과도한 군사적 팽창을 주시한다는 면에서는 협력의 대상이 되지만 중국을 적대시하고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지역 다자 안보협력 체제에 포함시키는 한일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중국의 다자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미중 간 세력균형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중 간에 개별사안들이 전략적 대립으로 발전할 징후와 그 위험성에 충분히 유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담론,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질서 강화를 위한 외교로서 한일 공동으로 동아시아 중견국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있다.

한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장기적인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 북

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북 전략 전반, 통일과정에서 한일의 협력, 통일된 이후 한반도와 일본의 협력적인 전략관계 설정 등이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대북 공진화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동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 대북 전략의 기본 인식 조정, 북핵 폐기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주변국들 간 전략대화 추진, 더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상정한 동북아 지역전략에 대한 대화의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한일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통일한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 관계 설정을 구체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발전방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국 안보전략 변화에 대해 한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공유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안보 아키텍처의 지속적 변화에 대한 인식, ②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한일의 인식, ③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대한 한일의 대응, ④미국의 지구적 재배치(global rebalancing) 전략과 아시아 중시 경향, 동아시아 해군력 재배치 계획 등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일 간의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다양한 안보 이슈들에서 협력하면서 미중을 함께 참여시키는 안보문제 해결의 인식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아시아 다자안보기구를 활용하면서 한일의 협력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6자 회담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 전략의 마련,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CSCAP) 등 기존의 다자안보기구에서 한일의 공동 노력 분야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일의 협력은 동아시아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첫째, 유엔의 틀을 통한 분쟁지역에서의 활동 및 민군작전(CIMIC),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PKO)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난민, 환경, 재해·재난 긴급구조 활동이나 해양 불법행위 및 해적 대책 등에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셋째, 해양수송로의 공동방위 협력을 들 수 있다. 넷째, 재해 및 재난, 환경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레짐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바세나르체제, 원자력공급국 회의(NSG) 등 제도화된 협력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

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한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IV.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한일 양국 간의 에너지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과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에너지협력 면을 보면, 한일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에 대해서도 협력할 여지가 크다. 또, 신자원의 탐색과 개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전력이용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양국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간의 에너지협력은 ①에너지 저소비 사회,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협력, ②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기술혁신, ③세일가스, 세일오일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협력, ④한일 에너지협력체 모색 등의 네 가지 협력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원자력협력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한일은 물론 주변국들과 공유하여, 지금까지 정치, 안보 차원의 주요 관심사였던 핵의 비확산에 관한 '핵 안보(nuclear security)' 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safety)'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은 원자력 재해의 예방 내지 대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원전의 안전체제를 상호 감시하고, 또한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은 안전한 원자로의 연구개발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핵연료 사이클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여야 한다. 즉 한일의 원자력협력은 ①원자력 안전협력의 제도화와 원자력 사고대응 네트워크의 구축, ②포스트 후쿠시마(post Fukushima) 한일협력, ③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군사적 사용 금지)을 위한 협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V. 환경협력

환경문제 대응은 한일 양국에서 공히 중요한 과제이다. 양국의 시민사회는 환경을 배려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는 에너지를 비롯한 세계 자원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일 양국에서는 절실한 과제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중대한 관심사이다.

환경 분야의 한일협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도 양국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닌다. 우선 환경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분야이므로 양국의 정치, 안보 등에서 균열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대화 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분야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된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자,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이 일상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한일 간에 폭넓고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시민적 가치에 대한 책무와 더불어 양국의 뛰어난 민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신뢰할 만한 나라로서 국제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문제의 개별 사안에 따라 한일협력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가 매우 다양하며 양국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우선순위나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영역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고 현실에 기초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일 간에는 세 가지-지역 내 월경성 환경문제 대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유효하다.

첫째, 지역 내 월경성 환경문제-월경성 대기오염, 지역해 오염, 원자력 활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방사능오염 위험, 이동성 생물종 또는 자원의 멸종·감소·고갈 등-에 대한 대처이다. 이 중 대부분은 그 성질상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국이 투명성 높은 협력의 틀을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향후 지역협력 틀의 기초를 마련하고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의 참여를 얻어 동북아지

역 전체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일 양국을 포함하여 지역 내 월경성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협력체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실천적인 유효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처가 필요한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공통인식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미 지역과 달리, 동 지역에서는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사전통보, 협의, 긴급사태 통보, 환경리스크 및 영향의 모니터링, 결과 공표, 정보 교환 등을 포함한 절차적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 의무를 도입하는 2개국 간 또는 지역 조약도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①한일 양국 간 월경성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의 공유(공통지표에 근거한 공동조사·연구 추진, 과학적 지식의 공유 등) ②양국을 포함한 기존 환경협력체의 유효성에 관한 포괄적인 검증 ③중국을 포함한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한 기존 협력체계의 재구성 또는 새로운 협력체계의 설정 ④월경성 환경협력에 관한 절차적 의무의 도입-특히 IAEA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조약에 근거한 한일 상호 간의 긴급사태통보의 구체적인 실시에 관한 2개국 간 조약 작성-을 추구하는 일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④는 동북아지역에서 구체적 의무를 정하는 조약의 선례로서 앞으로 월경성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다각적 협력이다. 한일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단기간 내 이해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일 양국이 협력 의제를 공유할 여지는 적지 않다. 한일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은 ①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의 협력 ②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정책 협력 ③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적응분야 협력 ④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슈퍼그리드 구축 가능성 모색의 네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일 복합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ODA, 즉 환경 ODA에 관한 한일협력이다. 양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개발격차가 지대하고 환경파괴의 피해가 빈곤층에 집중되는 '기후불의'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경제통합의 장애물로도 지적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내에서 단 둘뿐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환경 ODA를 중

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환경 ODA 수요는 지대한 반면 공여국의 원조역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양국이 동일한 수원국에 대하여 중복공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한일 환경 ODA 협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한일 양국은 ①DAC와 녹색기후기금(GCF) 내 공조와 협력 ②한일 동아시아 환경협력 프로그램 주창 ③동일 수원국내의 무상원조 분야에서의 협력, ④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계몽홍보 활동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VI. 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구축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을 통한 성장이란 목표와 함께 협력을 통한 공생과 공영의 가치를 중시하는 복합적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십수 년간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제도적 협력 노력이 있어 왔으나 제도의 실효성, 국제협력을 주저하는 국내정치적 요인, 국가 간 전략적 경쟁 등으로 여러 결함을 노정해 왔다. 양국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면서 국내정치적 대립과 대외 전략적 고려가 상호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서 관건은 아키텍처의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 아키텍처는 시장주의적 플랫폼 혹은 시장경쟁과 협조를 통한 부강(富強)을 넘어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플랫폼 혹은 표준을 담아야 한다. 즉, 근대적 경쟁과 협조, 탈근대적 공생을 복합하는 신(新)자본주의 표준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부문에서 한일 양국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고도화를 돕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장벽 철폐라는 의제를 넘어서서 무역촉진적인 원산지 규정, 비관세 조치 철폐, 무역 원활화, 생산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서비스·투자의 자유화·원활화, 지적재산권 보호, 경쟁법의 조화 등 지역공통의 국제규율을 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FTA를 추진하며 경제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진흥 등 역내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 어젠다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거시금융 부문에서 기존의 ASEAN+3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

협정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일은 공동으로 거시경제상황과 금융부문의 건전화를 상호 감시하는 서베일런스(surveillance)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설의 서베일런스 기관으로 기대되는 ASEAN+3 거시경제연구소(AMRO)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역내 환시세의 동향이나 급격한 자본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IMF 링크의 완화 혹은 철폐를 통해 자국의 판단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발동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한만료로 종료된 엔-원 스와프 증가분의 재개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엔-원 외환시장을 창설, 거래규모를 확대하고 나아가 엔-위안화 시장과 통합함으로써 역내 경제거래의 원활화, 리스크 축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역내 격차시정을 위하여 개도국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국은 동아시아의 신자본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 발전·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발전경험과 수원국·공여국으로서 경험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발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일은 중국 등 동아시아의 신흥 파트너에 대해서도 열린 형태로 공동프로젝트 실현, 협력이념의 공유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부개발원조는 민간투자를 통한 개도국 빈곤사감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유효유가 되어 공여국과 수원국 쌍방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경을 초월한 대기·해양오염 등의 환경문제, 전염병의 유행,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급변, 테러 등 지구적 문제군들이 개도국인 빈곤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양국은 개발협력에서 투명성 확보와 정책규율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Ⅶ. 복합 공생 기술협력

한일 간의 기술협력은 공적개발원조에 의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남북형’에서 시작하여 직접투자과 기술의 스피로버라는 민간협력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왔다. 향후에는 한국의 기술기반 확립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한일 간 격차 축소와 더불어, 보다 폭넓은 민간기업 협력 및 선진국 간의 ‘북북형’ 기술협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일 간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 간에 연구개발 협력 체제를 정비하여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서로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가 높은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경우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세계적인 조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이 기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협력체제의 정비·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한일 양국은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 산업집적을 살려 민간협력을 촉발할 수 있는 정부 간 대형 기술협력 프로젝트 활용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의 과제극복, 성장기반 공유, 과학기술 제 영역을 둘러싼 협력 등이 그러한 분야이다.

셋째, 기술협력은 민간 기업에게는 기업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며, 한편으로 첨단기술 개발은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등 경쟁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협력의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에 대해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개발협력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합공생을 위한 한일기술협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일이 공통의 경험을 통한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원조를 효율화하고 이와 더불어 신뢰관계의 구축에 이를 활용해가는 것이다.

I.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1. 머리말

지식 · 문화 · 미디어는 개별국가의 학자,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이 개인적인 연구와 창작, 의견을 내외에 발신하는 활동영역이다.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연구와 창작의 소산이지만, 대외적인 발신과 교류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문화를 꽃피우고,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잠재력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개인의 소산물인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에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외적 호감도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의 자원으로 삼기도 한다. 보편적인 문화와 지식은 개별 국가의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는 잠재력을 갖기도 한다. 물론 국가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의 잠재력을 악용하여, 체제의 선전이나, 국가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체제선전과 홍보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에서 개별 국가의 연구자,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의 연구와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그 국제적 발신과 교류도 적극 촉진할 책무를 갖는다. 이 같은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류와 활발한 국제간 협력이 개별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보다 운택하게 할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보다 증진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지식 · 문화 · 미디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각국에까지 확대될 경우, 상호 간 국경이나 내셔널리즘의 대립과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는 인식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2. 지식·문화·미디어 분야 협력의 의의와 기본방향

(1) 한일신시대 프로젝트 제1차 공동연구에 포함된 지식·문화·미디어 분야 제언

이 같은 인식하에서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위원회 제1차 공동연구의 보고서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2010.10)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동아시아 역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기하면서,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한일 간 협력 과제로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인식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지식은행 프로젝트를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 내의 연구기관 등에서 동아시아가 공유해야 할 근현대 정치외교사와 사상사 관련 자료, 문화 관련 자료를 각국 언어로 발신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중일 3개국의 출판인 회의에 의한 동아시아 현대 고전 발간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둘째,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운영 중인 아르테(ARTE)와 같은 공영방송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 공동의 영화와 드라마 및 음반 제작, 한일 양국의 추가적인 문화개방, 동아시아 공동의 스포츠 리그 창설 등을 제안하였다.

(2) 기존 지식·문화·미디어 분야 협력의 개요와 과제

이미 한일 간에는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위원회 제1차 공동연구 보고서 공표 이전에도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결실도 적지 않게 거둔 바 있다.

정부 간에는 1983년 이후 한일문화교류 실무자 및 국장급 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1998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일·일한 문화교류회의가 3기에 걸쳐 구성되면서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을 행한 바 있다. 2007년 이후에는 한국, 일본, 중국 간에 문화장관 회의가 격년으로 개최되면서, 상호 문화교류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상과 지원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언론기관이 참가하는 다양한 협의체

와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1994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베세토 연극제나,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 축제 한마당 등이 한일 간, 나아가 한국, 일본, 중국 간의 문화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8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된 한국정부의 대중문화 개방 조치를 배경으로 영화와 드라마, 가요 분야에서 한일 간에 문화교류 장벽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고,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경우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의 결과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시민사회간의 친밀감이 증대되면서, 양국 간 역사나 영토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어도 양국 국민 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가능해진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와 영토 등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관한 양국 국민간의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상호불신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경을 넘는 문화의 흐름이 때로는 내셔널리즘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수용과 향유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개인들의 선택과 취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자국 문화의 대외 전파와 교류를 국가의 내셔널리즘적 수단으로 타국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식·문화·미디어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3. 한일 지식·문화·미디어 협력 5대 과제

(1) 지식-학술 분야 협력: 동아시아 지식뱅크 구축 및 확산

한국과 일본 간의 근현대 역사 속에는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노력들도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협력과 신뢰의 다양한 가능성들이 내재되었던 양국의 역사, 정치, 문화 자료들을 성실하게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면서 역사를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존재하는 역사, 문화, 교류협력 관련 자료들을 관련 기관들이 축적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려는 노력이 후

세대들에게 역사에 대한 성찰의 재료를 던져주고 미래 한일 간의 협력과 동아시아 협력질서의 방향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자국의 역사, 문화, 정치 등 제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료를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자료센터, 국립외교원 외교사 자료센터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국회도서관 근대디지털 라이브러리,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외무성 외교 사료관 등이 근현대사와 관련된 자국의 사료들을 축적하고, 일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역사자료센터 등을 링크시켜 네트워크화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국어 이외의 상대국 언어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를 겸허하게 되돌아보면서, 공개된 역사자료들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공동연구가 정부 간 차원뿐만 아니라, 양국의 연구자와 교사, 시민들이 참가하는 민간 차원에까지 활발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는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한일 역사공동 연구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성과가 공표된 바 있다.

양국 정부의 주도로 역사공동연구를 지속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역사대화 공동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일 양국의 중고교 교사나 대학에 속한 연구자들에 의한 역사공동연구는 상호신뢰를 축적하면서, 양국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양국의 역사 공동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욱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다 같이 선진국가의 반열에 진입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공생, 환경오염, 젠더, 교육, 장애인 등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글로벌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구온난화, 해양 및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과제에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유사한 사회구조 하에서 보다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식사회가 이러한 분야

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해 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일본국제교류기금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이 같은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 과제들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지원의 규모와 연구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에서 국제 문화 및 지적 교류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이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제도가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의 문화교류와 지적 교류에서도 축소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축소는 기왕에 추진되던 한일 간 지적 교류, 문화교류의 성과를 염두에 둔다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연구가 지속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나 민간 기업에 의한 문화 교류, 지적 교류의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에 의한 양국 문화 및 지적 교류에 의한 재정지원은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2) 문화-예술 분야 협력: 한일 공동 아시아 문화 창작촌(創作村) 건설

한국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단계적 개방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드라마와 영화, 대중음악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2007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일 문화서틀 사업이 합의된 이후에는 중국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공동 공연과 컨테스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추세를 지속시키면서, 향후에는 문화 창작의 단계에서 각국 문화 예술인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 작업을 촉진하는 장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국경을 넘어선 예술가 상호 간의 교감과 교류를 통해 창작의욕이 분출되고, 보편성을 가진 창작품이 나올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과 일본은 예컨대 각국의 소설가 및 시인, 영화인,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구상을 공유하고, 시작품들을 서로 향유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창작촌(創作村)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음악제가 매년 개최되는 대관령이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최되는 홋카이도의 유바리 같은 곳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양국 간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에 있어 차세대 젊은이들의 적극적 참가와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왕성한 창작의욕을 갖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있어 동일한 지향점

을 갖는 타국의 청년 세대 예술인과의 문화적·지적 교류는 더 보편적이고 열정적인 문화예술 작품을 낳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 간에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 학문적 교류가 진작되는 프레임워크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체육 등을 전공하는 양국 청년 세대 간에 자신들의 잠재적 예술재능과 그 성과물들을 공유하는 공동의 음악제, 미술제, 영화제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는 상대방에 대한 쌍방향 교류뿐만 아니라, 함께 세계를 향한 문화 발신도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의 부상에 따라 구미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과 병행하여, 공동으로도 세계를 향해 문화를 발신하는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양국의 정부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제3국에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는 지적 교류의 촉진으로도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제3국에서 한국문화원과 일본문화원에 의한 양국 문화의 공동 전시와 공연,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공동지원 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상업적 이해가 우선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거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예술가 개인의 창작활동과 비즈니스 양면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 및 공연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2006년 이후 한일 양국 정부는 저작권 당국 간 협의회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2011년 9월에는 문화정책 당국 간 저작권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 예술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그 적용 범위도 여타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의 정치 외교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면, 그 여파로 특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문화관련 교류행사와 사업이 중지되거나 연장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화교류의 중단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신이 쌓이기도 하고, 문화를 향수해야 할 양국의 시민들과 청년층이 암암리에 받게 될 피해도 적지 않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로서 이 같은 행사의 취소는 국제적인 이미지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일 양국은 냉전기 유네스코가 선언한 “정치관계는 악화되어도 문화교류는 발전시켜야 한다”(1963년경)는 권고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여도, 양국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공동 천명할 필요가 있다.

(3) 한일 간 지식과 문화의 공유: 한일 공동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부단한 문화교류를 통해 전통문화를 각각 발전시켜 왔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그 성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의 현장으로서 양국의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일 상호 이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양국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공동의 학술조사와 공동전시 등을 통해 자국의 전통문화를 상대국에 소개하고, 문화교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해 양국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전통문화의 교류와 상호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대국가로부터의 방문자들에 대한 특별할인 대우제도 시행과 지방 각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의 공동 관람권 제도 창설 등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 그리고 문화교류의 역사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전통문화의 보고인 양국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국제사회에 대해 공동기획전시를 실행함으로써 양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전시는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양국 공동의 지적 공헌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발한 공동기획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문화박물관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전쟁과 갈등의 역사는 현재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기억되고 있어서, 배타적 내셔널리즘의 대립을 낳을 수 있다.

근대 이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제국주의 역사는 배타적인 형식이 아니라, 공동으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비단 전쟁과 갈등의 역사 뿐 아니라 문화교류와 상호협력의 유구한 역사도 차세대들을 위해 기억하는 공공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역사문화박물관을 기획하고,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의 역사

문화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소장품이나 콘텐츠 등을 공동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

(4) 한일 출판 미디어 분야 협력: 한일 미디어 포럼 창립 및 운영

한일 관계의 진전과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의식의 형성에서 일본의 한국관련 보도와 한국의 일본 관련 보도가 갖는 영향력은 변함없이 막강하다. 상호의식의 갈등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자극함으로써 빚어지는 측면이 있다. 일부 '비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상대국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루는 보도, 양국 문제에 관해서 자국에서 주류인 입장에 근거한 일방적인 보도 등이 그에 해당한다.

상대 국가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언론 및 출판경향의 자제가 요청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언론인과 출판인들이 저널리즘 포럼 등의 장을 마련하여, 보도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상호 객관적 보도 및 출판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통해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중문화, 스포츠 등에 대한 시사 지식(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상대 국가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사상, 사고방식, 세계관,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인식공유를 위해 이러한 방면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대가 불가결하다. 이미 한국, 일본, 중국의 일부 출판사들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유해야 할 윤리, 사상, 역사, 문화에 대한 상대국의 고전작품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동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소설 등 문학작품의 영역에도 확대되어야 하며, 한국, 일본, 중국의 출간도서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한중일 국제도서전의 개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듯이, 타국의 저명 작가를 자국의 대학에 장기 초빙하여 학생 및 연구자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작품 집필도 지원하는 작가 초빙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은 국경을 넘는 문화, 지식 교류에서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된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한국인이 일본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일본인이 한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이 서로의 대중문화에 접촉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손쉽게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인터넷으로 인해 이웃나라 간의 무경

계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단 인터넷 공간이 갖는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셔널리즘”이라 불리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논의는 표현을 거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적의와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그릇된 정보가 범람하기도 한다. 상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입구”가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극단적인 논의가 전개된다면, 특히 청년 세대에게 상대국가에 대한 단면적인 시각을 갖게 할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폐해에 유의하여 인터넷 공간 상에서의 상대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간의 협의를 통해 상대국가에 대한 악의적 담론을 주도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찾도록 한다.

(5) 한일 간 미디어를 통한 문화 공유: 동아시아판 아르테(ARTE) 창설

상대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성 높은 고급문화는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공연의 기회가 적고, 한국과 일본 상호 간의 교류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통문화나 예술성이 높은 고급문화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호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전통공연문화와 고급문화를 상호 소개하기 위해, 이미 독일과 프랑스 간에 공동으로 설립되어 쌍방의 고급 전통문화를 서로 소개하는 아르테(ARTE)와 같은 문화, 예술, 교양 전문 TV 채널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아르테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공동의 교양 채널로 1992년 설치된 이후 양국의 문화 보급과 이해 심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이러한 아르테와 같은 채널을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과의 사이에 설치하여, 한국어 및 일본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어로 방송된다면, 상호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문화 뿐 아니라 이러한 방송 매체를 통해 각국의 고전적 영화와 드라마도 보다 활발하게 방영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판 아르테가 설치된다면 방송국의 운영과 기획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의 방송인과 문화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판 아르테의 방송센터는 지리적으로 세 나라에 근접하고, 교통편도 양호한 제주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Ⅱ.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1. 머리말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2010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란 “한일 양국의 정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 생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한일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먼저 인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현재 한일 관계의 특징 및 과제를 검토한 후,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015년은 1965년에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본 보고서의 제안이 실현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입각하여,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한일 인적교류 네트워크의 구축에 힘쓸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 한일 인적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제1기 보고서가 지적한대로,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일 관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비서구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 다원적 사회문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로서 평가받고 있다. 한일 관계는 식민·피식민 관계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지만 긴밀한 정치경제 협력을 통해서 대등한 파트너로 발전한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양국 관계”이다.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을 왕래하는 국민은 연간 1만 정도에 불과했지만 21세기를 맞이하는 무렵에는 1일

1만 명 시대가 열렸고, 2012년의 양국 방문자 수는 556만 명까지 늘어나는 획기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양국 국민의 왕래자 수의 획기적인 증가와 함께, 양국 국민 간의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교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은 교류 사업 등 양국 국민 간의 교류의 형태도 다양해졌고, 이러한 활발한 교류가 한일 관계 발전을 오늘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차원의 교류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와 그 이후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 등으로 상징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일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양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확대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심화·발전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일 양국관계를 고찰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한일정치권을 잇는 네트워크의 현저한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 양국관계를 어렵게 하는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양국의 영향력 있는 정계인사들이 직접 나서 상당한 물밑 작업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중재와 조정 역할은 갈등이 증폭되어 정부 또는 국민차원에서 직접적인 충돌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치인들 간의 교류도 활발했고, 일제시대를 거친 한국 정치인들의 일본어 구사능력도 양국 지도자간의 친화력을 높인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양국 정치권의 끈끈한 인맥은 한일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중재,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양국 정치권 사이의 인적교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먼저 그간 양국을 잘 이어왔던 원로 정치인들의 은퇴를 들 수 있다. 그들의 퇴장이 그들이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의 승계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권의 인맥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국 정치권의 급속한 세대교체와 선거로 인한 잦은 인적 교체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신인 정치인들은 과거에 비해 한일 관계를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양국 정치인들 간의 언어소통능력 또한 과거와 같지 않다

는 점도 상호 긴밀성을 저하시킨 요인이다. 한일/일한 의원연맹조차 이렇다 할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최근의 언론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원로들의 퇴장과 급속한 세대교체는 현재의 한일 정치권에 '상호 대화'와 조정,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인 관계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물론 과거에 비해 시민 레벨의 네트워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과거 형태의 양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다층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거물급 정치인 몇 사람이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실제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정치차원에서의 관계악화가 여전히 한일 관계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일 정치인들 간의 네트워크 재구축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창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일 간에는 이미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교류의 확대보다는 한일공동미래비전을 논의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복합적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제1기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일 양국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가치, 그리고 제도와 관행 등의 국제공공재를 공동으로 창출해 나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일의 다양한 행위자가 다층적 영역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제1기 프로젝트가 제안한 것과 같이 한일 간에 복합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정치영역에서 마찰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도 공헌할 수 있는 한일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경제영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본, 정보, 기술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일공동시장이 실현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향한 전진이 시작될 것이다.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한일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지금의 한일 관계에 요구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최근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국제경제에서 한국의 눈부신 지위 향상과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가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는 경쟁자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양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정세 변화와 전술한 한일 양국 지도자층의 세대교체 등이 양국의 상호인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러한 점이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한일 간의 협력을 정체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신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전술한 양국 간의 새로운 현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복합 공생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일 신시대'에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지탱해 온 기존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맹목적으로 승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술한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다른 접근 방식,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제1기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21세기의 국제 사회는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양극화와 탈냉전기의 다극화의 시대가 아닌 복합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냉전적 사고와 탈냉전적 사고를 뛰어 넘어 새로운 시대의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과 미래와 직결되는 북한과의 관계를 포함한 전략적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균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세대 간의 균형이다. 현재 한일 양국 사회는 기존의 양국 관계를 주도해 온 세대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상대국을 파악하는 새로운 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반영한 인적 네트워

크의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인적 교체를 반영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네트워크가 단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주도해 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그 경험의 계승은 물론이고, 각 세대 간에 형성되어 있는 상대국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한국 사회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세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민족적이면서도 일본에 비판적인 세대, 그리고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 성장한 일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젊은 층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잘 조화시키고, 차세대가 한일 관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이후 더욱 고령화되어 간다는 사실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주로 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세대뿐만 아니라 장년층세대의 활력을 한일 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의 균형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는 주로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가 주도해 온 중앙 간의 관계였고, 양국의 지방간의 네트워크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네트워크는 한일 관계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에서 지방 분권과 지역 주권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서울-도쿄 간 관계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한일 지역 간에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역 간 네트워크는 이미 지방도시간 자매도시 협정이라는 단순 교류차원을 벗어나, 초국경적 경제 통합을 시야에 둔 복합적 네트워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시대의 한일 관계는 이러한 지역과의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인식해야 할 것은 단기적 달성과 장기적 목표를 함께 고려한 시기적인 균형이다. 한일 관계의 '취발성'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지만, 인적 네트워크의 성과라는 것은 그 성격상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성과를 거두려면 장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한 성과를 내려고 서둘러 보다는 단기와 장기 목표로 나누어 더욱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일공동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한일 공동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일에 착수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시기적 균형이 고려되지 않으면 변화하는 한일 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한일의 보다 장기적인 비전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상 지적한 '세대 간 균형,' '지역의 균형,' 그리고 '시기적 균형' 등이 고려된 새로운 한일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네트워크 실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복합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한 5대 프로젝트

위의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다음 5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 네트워크의 구축과 공존

한일 차세대 지도자 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다양해진 인적구성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① '한일 2040 포럼'의 창설

우선,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각계각층의 젊은 지도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기적인 지적 교류의 틀인 '한일 2040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포럼은 어떤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리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해진 사회의 각 분야의 젊은 지도자들을 망라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 관계

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들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일 관계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한일 간에는 전문분야별, 직종별 협력관계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횡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포럼에서 각계, 각 분야의 리더 간에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한일 간에 산재하는 전문가집단의 협력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 포럼이 창설되면, 다루어져야 할 주제를 한일 양국 현안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한일 관계'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이고 지구 규모의 주제로 한일공동미래비전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일 관계를 양국관계라는 좁은 틀이 아닌 글로벌,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조명해 나가는 사고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한일 차세대 정치지도자 포럼'의 창설

최근 한일 관계가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양국 간 정치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양국의 정치인 간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 분야에서의 한일대화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한일 차세대 정치 지도자 포럼'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 양국의 젊은 정치인들이 한일현안과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포럼은 신진의원들의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거 등으로 인한 인적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사실 한일 간에는 지적 교류의 틀로서 '한일포럼'과 '한일문화교류회의',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의 장으로 '한일의원연맹'과 '한일협력위원회'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이러한 교류의 장은 한일 관계발전에 지대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포럼은 주로 양국의 중진급 지도자와 한일 관계 전문가를 중

심으로 구성되어 한일의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중진인사들의 교류의 장에 더하여, 앞으로 양국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한일 간의 각종 포럼과의 새롭게 창설될 네트워크의 장이 서로 공존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공고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등 한일 지적 교류 분야에서 실적이 풍부한 기관들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포럼 창설과 기존 포럼들과의 공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 간의 지적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일신시대에 필요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한일 양국을 이해하는 차세대의 육성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차세대의 육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러한 차세대의 육성은 한일 양국의 국가 이익에 이바지하게 됨은 물론이고, 그 육성과정에서 한일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한일신시대를 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국 차세대의 한일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리더의 공동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① ‘한일 10만 명 유학생 프로젝트’의 실시

양국 간에 존재해온 기존의 차세대 교류 사업은 대학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을 통한 교환학생제도, 한일 정부가 각각 주관하는 국가장학생제도, 어학연수와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자비유학, 또는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류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 통계(2012)에 의하면,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일본 유학생은 정규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합하여 4,093명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 유학생인 한국 학생은 19,994명으로 집계되었다.

한일 간 유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한일신시대에 걸맞은 복합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교류와 상호이해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한일 간 유학생의 획기적인 상호 확충을 목적으로 ‘한일 유학생 10만 명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향후의 한일 관계에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학금 제도의 창설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 제약 등이 있음을 감안해 현존하는 제도를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각종 유학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 수업을 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업이나 민간재단 등에 의한 장학제도나 유학지원체제의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한일대학 간 컨소시엄’ 제도의 도입

한일 양국의 대학들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현해탄을 오가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간 컨소시엄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상대국의 단수 또는 복수의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이를 학생의 원래 소속 학교에서 인정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컨소시엄이 체결되면 공동교육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며, 각종 정부사업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길이 열릴 것이다.

부산시와 후쿠오카 시에 소재하는 24개 대학들은 현해탄을 끼고 컨소시엄을 실현한 바 있다. 이들 24개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다른 회원 대학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컨소시엄 체결의 취지이고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경험에서 참고해야 할 점은 컨소시엄을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국에 체재하면서 복수의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려고 할 경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고, 상대국 체재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어느 대학이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현존하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③ ‘한일 공동 국제공무원 육성 프로그램’의 실시

세계화가 급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환경, 지구온난화, 국제 테러문제 등 국경을 초월한 지구 규모의 현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제기구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제공무원으로서 활약하기를 희망하는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호응하여 한국과 일본은 공히 글로벌 인재, 특히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일 양국의 국제공헌에 대한 공동관심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국제공무원을 공동으로 육성·공급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단순한 경쟁 상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 상대로 인식하게 되면, 국제기구에서의 쿼터 공유 등을 통한 한일 간의 상호 융통성 실현을 포함한 과감한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후 한일 관계를 책임지게 될 차세대 간의 상호 이해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해양크루즈 공동추진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양국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은 학습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아시아 시대’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당위성적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주변 세계를 직접 견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우호적인 동아시아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교육단체와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크루즈 선을 이용한 한국의 인천·부산, 일본의 후쿠오카·오사카, 중국의 대련·상해 등을 잇는 해양 항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항행을 통

하여, 양국의 청소년들이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돌며 역사 및 문화 탐방을 함으로써 동북아 3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동아시아 역사 및 문화교류의 역사', '동아시아 전쟁과 평화', '동아시아 사회의 진화' 등의 주제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하면, 한일, 한중일 청소년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지방 중심의 대규모 인적교류 추진

한일 간의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울-도쿄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해 온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한일 관계를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형태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관계가 구축되면 한일 양국은 더욱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그것이 곧 한일 갈등을 예방하는 견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기존 인적교류의 형태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일시 중단되어도 별다른 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한일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기존에 계획된 교류를 쉽게 중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일 현안이 발생하여 양국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 계획되어 있던 민간회의나 수학여행 등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교류가 중단되더라도 실질적인 상호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교류의 중단이 곧 국민생활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로 연결되는 구조로 양국관계가 엮여 있다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갈등을 중앙 정치권에서 쉽사리 일으키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국민견제' 메커니즘은 한일 관계를 기존의 중앙 간의 관계라는 단선적 관계에서 보다 이해관계로 점철된 중층적 복합관계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중층적 복합관계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의 일례로서, 현재 부산과 후쿠오카에는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이라는 아직은 초보적인 구상이 존재한다. 부산과 후쿠오카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양 도시가 공통으로 가진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두 도시는 어려운 지방도시라는 점이다. 한국

과 일본은 중앙편중이 세계 유례없이 심각한 나라이다. 특히, 부산은 한국의 광역시 중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양 지역으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부산과 후쿠오카는 한일 양국을 잇는 가장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도시야말로 고대부터 한일로 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해 왔고, 빈번한 인적·문화적 교류는 상호간의 높은 호감도를 축적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서울-도쿄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선적 한일 관계는 부산-후쿠오카라는 긍정적 요인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2006년 양 지역의 각계 지도자들이 보다 복합적인 한일 관계의 실현을 위해 ‘부산·후쿠오카포럼’을 창설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9년을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로 지정하여 각종 우호행사를 진행한 바 있고, ‘부산·후쿠오카 경제협의회’ 설립 및 ‘부산·후쿠오카 경제사무소’ 개소 등 시정부 간 경제협력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 도시는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중앙 차원에는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일 양국 간 교과서 문제가 있는 반면, 부산시와 후쿠오카 시는 양 도시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초등학교 부교재를 개발하여 양 도시 어린이들에게 소개하여 서로 간에 우호적인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일해협권칼리지’도 그 확대가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지역 간 인적교류의 전면적 확대는 지방 도시 간의 초국경적 이해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방이 오히려 중앙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서울-도쿄 간의 정치문제로 야기되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인구가 연간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도시를 잇는 항공노선의 수는 다른 국가도시를 잇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또한 배편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오픈스카이 협정은 한일 간 항공노선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양국과 제3국의 저가항공사들이 앞다투어 한일 노선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일본이고,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다. 특히, 김포-하네다 셔틀 운항 시대가 열림으로서 한일 간의 왕래가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관광객의 왕래가 크게 늘었다.

또한,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 국민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의 면제는 이러한 양국 간 왕래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애초 한국 국민에 대한 일본입국 비자면제로 인해 일본 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것이라던 우려는 최근의 출입국 통계를 보더라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한일 상호입국 비자면제 제도의 도입은 상대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한편, 일본 장년층의 주도로 일어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일본인의 한국 관광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로도 이러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간다면, 한일 간의 인적교류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더 많은 관광객과 국민이 실감하게 하기 위한 제2단계 입국절차 간소화를 고려해볼만 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한일 양국은 양국정부가 발행하는 여행패스만의 제시로도 출입국 수속이 가능한 '한일관광패스(KJ/JK Tourism Pass)'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여, 과거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기록이 없는 순수 단기관광목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 간에 실시 중인 회원국민들을 위해 공항과 항구에 설치된 '특별통로'를 참고할 수 있다. 가령 '한일관광패스'를 소지한 한일 양국국민들은 출입국장에 설치된 특별통로에서 패스를 출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통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일 여행객들의 출입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한일이라는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도입되는 첫 프리패스 출입국제도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창의성과 우호관계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Ⅲ. 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건축

1. 머리말

오늘날 국제안보질서는 근본적인 변동을 겪고 있다. 21세기 지구적 차원의 국제 정치가 급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 성장, 사회문화적 발전, 문명의 중요성 부각 등에서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근대적인 세력균형 정치 때문에 강대국 간 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미중 간의 각축을 비롯한 동아시아 강대국들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변수로 지속될 것이고, 동아시아 아키텍처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정책도 근본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 유럽의 금융위기는 여전히 심각하며, 유럽연합(EU) 통합에도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향배는 예측이 어렵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지역질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결속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돌이켜 보면 냉전의 종식 이후 1990년대에는 인간안보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국제평화협력 또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 등 다국 간 협력의 기회가 생겨났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小淵恵三) 수상 간에 실현된 한일의 '화해'는 이러한 시대 조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역사의 진화는 '정지'의 시대에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에 압도당한 것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사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정세상황이 생겨나고,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타국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일이 공동의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지역 전체의 상생하기 위한 안보아키텍처이며 이를 지역복합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가 여전히 강대국이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등

장, 하드 파워 이외의 지식과 문화의 중요성 증가 등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출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아시아 상생을 위한 안보 분야의 복합 네트워크를 향한 의지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에서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과거 한일의 장기적, 전략적 협력을 돌이켜 보면 냉전기의 협력, 미국을 축으로 한 간접적 협력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냉전 종식 이후 북한 문제, 지구적 안보 사안 등에서 제한된 양자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다자주의에서 지역협력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안보 분야 협력은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향후 동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한편, 미국을 축으로 한 동맹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미중 간의 각축에서 양자 간의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군사, 경제, 문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도, 즉 아키텍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들의 건축구상이 상호 배타적이고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한일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공생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창출하여 세력균형의 변화의 과정이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거나 군사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구상에 참여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전통, 인간 안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시아의 안보구도 변화와 한일협력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강화는 21세기 전체를 통해 아시아 안보구도를 변화시킬 추세임에 틀림없다. 미국 등 강대국들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군사적 균형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으로 관여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미중 관계는 구조적 협력과 경쟁의 구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 양국의 서로

에 대한 인식 역시 스펙트럼이 넓어 어떠한 전략적 비전이 실현될지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내에서 중국 위협론과 중국 위기론이 충돌하고 중국 내에서도 패권 경쟁론과 대미협력론이 비등하다. 경제적으로 양국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시작된 경제 위기 이후 패권 추진의 경제적 발판을 상실해 가고 있는 미국은 좁게는 중국, 넓게는 동아시아와 경제관계가 패권부활의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속적 경제성장을 해야만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일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이전되고, 미국 역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패권부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적 자유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중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부상과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해 인식과 평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일은 중국의 객관적 국력 평가, 향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방법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양국에 미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영향의 정도,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미국과의 동맹 관계 및 전략의 편차,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국 인식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한일 간의 공동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닌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변환, 다자협력구도 안착을 위한 중견국 외교 협력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향후 대중국 한일협력의 범위와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소위 아시아 중시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한편 중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중국의 과도한 군사적 팽창을 주시한다는 면에서는 협력의 대상이 되지만 중국을 소외시키고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간 한미일 간의 동맹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 주일 미군의 전력 및 운영 체계, 방식의 합리적 조정, 미국의 대 중국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참여 범위와 방식 설정 등의 의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지역 다

자 안보협력 체제에 포함시키는 한일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중 간 세력균형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미중 간에 개별사안들이 전략적 대결의 징후로 환원되어 해석되는 것을 배격하고 대안적 담론,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사안별로 해결책을 도모하고 추진하는 사안별 균형전략(issue-specific balancing)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제도적 갈등해결과정을 적용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다.

지역변환 외교를 위한 한일 공동의 동아시아 중견국과의 협력 및 주도 전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ASEAN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도, 그리고 일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견국 간 협력체제 마련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중견국 간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한편 집합행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기 행정부는 현재 영토문제 등으로 완전 정제되어 있는 한일전략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과 한미일 협력의 적정 수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안보적 도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각 이슈별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변환자 외교의 어떠한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차 약소국 외교를 극복하고 건축 이슈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한국은 기능적 역할로서 소집자(convener), 매개자(brokerage), 건축과정의 파트너(architectural partner)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자주의 이슈에서는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진정한 협력구도 정착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이 벌이고 있는 군사,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이들 경쟁이 무력에 의한 궁극적 해결로 치달지 않도록 경쟁의 규칙을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미중 양국 역시 공유할 수 있는 경쟁의 규칙을 제정하여 전략적 협력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는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결박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지구적 거버넌스는 권력정치적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G20정상회담 등에서 보이는 것

처럼 국가는 물론 다양한 행위자들과 지구적 여론에 따라 형성되어 가고 있다. 다차원적 규범은 지구화 시대에 동아시아에도 강하게 수입되고 있다. 미중은 물론 한일 양국도 개별사안을 규범에 기초하여 다루는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한일 양국과 지구적 차원의 국제제도 및 다차원의 행위자들이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교류, 당사자들의 의도 확인, 사안별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을 지역 다자 안보협력 체제에 포함시키는 한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름대로 다자군사안보체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우선 중국의 다자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중·러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②상하이협력기구(SCO)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③중·러·북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분석, ④중국의 대내외 군사·안보적 투명성 제고 요구 등의 이슈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 자원, 에너지 부분에서의 중국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당한 자원을 보유한 중국이 안보 문제 해결에서 경제적 자원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중국의 자원·에너지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해외 주요 자원의 확보를 위한 공세적 정책에 대한 대응, ②희토류 등 중국 내 주요 자원의 무기화 주의, ③동북부, 산둥 반도, 동남부 연안지역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이 중요 주제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전반적인 정치·군사적 전략 협의와 신뢰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세적 대중전략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한일의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양국 간,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범위 설정에 있어, 미중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한중일의 삼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와 일중 관계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국, 공동 대응과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3. 북핵, 북한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일의 협력 방안

중장기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하여 한일이 부딪힐 새로운 전략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내 리더십 교체로 단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북한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장기적인 북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는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북 전략 전반, 통일과정에서 한일의 협력, 통일된 이후 한반도와 일본의 협력적인 전략관계 설정 등의 목표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향후 한일 양국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대북 공진화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공동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노력 중에서 처음 추구해야 할 바는 한일 간 대북 전략의 기본 인식 조정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노력 방향으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노력 평가 문제,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증대, 향후 장기적인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햇볕정책과 원칙적 관여정책을 넘어서 제3의 패러다임 모색과 일본의 시각 간 공유점 확대 등이 있다.

현재까지 북핵과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북한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국제적 인식공동체의 형성과 정책적 협력체제의 진화가 부족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일이 대북 장기 전략을 함께 추구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관계 및 일본 역할의 진화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이슈들로는 ①새롭게 들어선 김정은 정권과 한일이 어떠한 전략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향후 각 시기별로 대북 전략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 ②향후 중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한일이 대북 공진전략을 위해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 ③일본이 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위해 보다 전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국내외적 조건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체제와 정권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 나아가 국제사회의 발전방향에 맞는 현대화와

선진화의 길을 견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병렬적 노력, 즉, 북한과 주변의 공동의 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북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이 표명되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들이 실시되는 동시에 주변국들은 북핵 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부경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체결하며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6자회담은 북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미양자회담 및 남북회담을 축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자회담을 복수적으로 추진하는 북핵 위기 해결, 더 나아가 북한 문제 해결의 대화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을 향한 한일 양국의 목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외교 기조를 실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①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 평화 통일 추진, ②한반도 통일의 불안감 해소, ③통일한국의 비핵화 보장, ④주변국가(미, 일, 중, 러 등)의 한반도 관련 이익 보장 등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21세기 전반기에 동북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과 새롭게 수교하여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주변국들을 활발히 방문하면서 지구적 표준에 맞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그리고 새로운 이념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트랙 II의 전략대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급속히 조장하여 북한 정권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거나 사태를 급변시킬 단초들이 조장되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과정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져 안보위협으로 발전하는 상황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북한이 개혁적 체제 속에서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선경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주변국들은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의 작동방식을 빠르게 익히고 이를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역시 긴요한 일이 될 것이며 한일 양국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북한은 에너지, 금융, 교육, 사회복지 등 기본 인프라가 취약하므로 쉽게 경제기반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켜 가며 이행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대북 이행지원팀을 만들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 폐기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대화는 반드시 한일 양국과 주변국들의 대북 전략 전반, 더 나아가 북한의 지위를 상정한 동북아 지역전략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반도 통일을 예상한 한일 양국 간의 전략적 인식 공유가 필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한일이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통일한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일의 공동노력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할 것이다. 관련 이슈들로는 ①통일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전략과 일본과의 협력, ②통일 한국과 일본의 안보이익 공통점에 대한 협의 및 확신 증대, ③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공고화 과정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한일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한미일 협력 네트워크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항상 전략적 협력차원에서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체제는 냉전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국력 성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향후 21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간의 세력균형의 변화, 지역 다자 안보체제의 복잡화, 전통안보 이외의 다양한 인간 안보 이슈의 등장, 한국, 일본의 국력신장으로 인한 미국과의 협력환경 변화, 남북, 양안 관계 등 기존 문제들의 새로운 전개 양상, 동아시아 영토, 역사 문제의 새로운 전개 등으로 인해 새로운 한미일 협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소위 아시아 중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도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간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쟁적 안보체제를 상생복합네트워크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미, 미일 동맹의 발전방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국 안보전략 변화에 대해 한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공유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안보아키텍처의 지속적 변화에 대한 인식, ②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한일의 인식, ③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대한 한일의 대응, ④미국의 지구적 재배치(global rebalancing) 전략과 아시아 중시 경향, 동아시아 해군력 재배치 계획 등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일 간의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비단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인 동맹정책으로 구체화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목해 나가야 할 점들은 ①한일, 미일 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강조, ②동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조 및 전략 구체화, ③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강조와 한일 간의 입장 차이 분석 등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일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지역평화의 틀로 참여시킬 것인가, 중국을 지속적이고 불편부당한 책임 있는 강대국의 안보전략을 사용하도록 만들 것인가, 동아시아의 공동발전을 위해 어떻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론, 군사력 증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한일의 대응 비교 및 공동 노력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일 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시아 안보 이슈들에서 협력하면서 미중을 함께 참여시키는 안보문제 해결의 인식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아시아 다자안보기구를 활용하면서 한일의 협력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6자회담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CSCAP) 등 기존

의 다자안보기구에서 한일의 공동 노력 분야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일협력이 진전되면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나 다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관여를 촉진하는 데에 유익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대한 관여를 심화시키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자세는 ASEAN 지역안보포럼(ARF)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도 연결되어 있다. 한일 양국은 미중 관계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다국 간 협력이나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부단한 정책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일의 정책대화는 호주, 뉴질랜드, ASEAN 국가들,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협력을 축으로 하여 미중 사이에 위치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안보대화나 비전통적인 안보협력(재해구조, 인간안보 분야 등)을 진전시킨다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이다.

5.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한일의 협력은 동아시아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한일의 글로벌 안보전략에 대한 상호 인식 및 협력 확인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인 과제이다. 기존의 군사력에 의한 안보위협에 더해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안보위협, 초국가적 안보위협, 해양에서의 안보위협과 같은 다자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안보 위협 등에 대한 협력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엔의 틀을 통한 분쟁지역에서의 활동, 민군작전(CIMIC),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PKO) 분야 등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KO 협력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한일협력 하에 단독임무수행 가능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분쟁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 나갈 것인가, PKO 협력법 제정 시 상호 간의 의사교환 및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호 간의, 혹은 다자 협력의 틀 속에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적절

한 통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차원의 안보협력네트워크 속에서 군수문자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추진과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견대상 지역정보의 교환, 파견자 교육 및 훈련, 구호물자의 공동 수송, 물자협력 등이 협력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에서도 평화유지활동은 물론이고, 구호활동이나 치안유지, 선거감시활동 등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며 물자협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난민, 환경, 재해·재난 긴급구조 활동이나 해양 불법행위 및 해적 퇴치 등의 협력분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해양에서의 불법행위가 증대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해적행위, 해양에서의 테러, 마약 운송, 불법 어로, 해상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한일 양국은 각각 해양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향후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다.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는 양국군의 주요한 임무가 되어 있으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은 공동작전의 수행 및 정보교환, 상대국 화물선의 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은 해적 및 해적테러 대처 등의 해상안전 부문 간 교류 증진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 한중일 간의 해양협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서의 안보협력은 한일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한중일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쉬운 분야이며, 한미일중 4국의 협력체계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이 상호 충돌하거나, 한미동맹 혹은 미일동맹과 일정한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비전통적 안보위협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글로벌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실행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송로의 공동방위 협력을 들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약 90%, 교역물동량의 30% 이상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데, 말라카해협은 해적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의 하나이다.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은 해적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관련 국가들은 이 지역의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한일 양국이 말라카해협을 통해 대규모의 교역물량을 수송하는 만큼,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퇴치와 함께 말라카해협에서 양국에 이르는 해양수송로의 공동 방

위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의 공동방위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협력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혹은 한미일중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넷째, 재해 및 재난, 환경 분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의 하나가 환경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한중일은 테러리즘 및 황사문제를 포함한 환경협력 등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안보협력의 차원에서 한일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황사, 해양쓰레기 등 환경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한일협력은 양국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협력 혹은 국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국제레짐 분야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레짐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바세나르체제, 원자력공급국 회의(NSG) 등에서 공동논의와 협력 등 제도화된 협력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근 사이버 테러가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부정 액세스에 의한 시스템 파괴, 데이터 복사 및 열람 등의 행위는 국가안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되었으므로, 사이버 침투 및 테러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의 협력은 한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IV.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1. 머리말

한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에너지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의 역사는 비교적 짧아 아직 본격적인 협력관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원의 확보, 에너지 자립 등의 과제는 천연자원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중요 정책과제이지만,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에너지협력 분야를 보면, 양국의 협력과제로 고려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화 추진을 위한 협력,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기술협력, 셰일가스(shale gas) 등 새로운 자원 채굴방법의 개발, 천연가스전 개발과 LNG 도입 등 가스 산업 전반에 관한 협력(일본과 한국은 세계 제1, 2위의 LNG 수입국), 원자력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이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시각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양국 간의 원자력 이용 및 원자력안전 등에 대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양국을 넘어 한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도 요청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규모의 원전재해가 한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은 양국에서 원전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있다. 한일 양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원자력발전소 및 관련시설을 국내에 보유하는 국가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세계적 규모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①2030년대에 원전제로 사회의 실현, ②10% 이상의 절전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비중을 최대화하는 등의 녹색 에

너지 혁명, ③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을 3대 목표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발표했다(2012년 9월). 하지만 경제계와 원자력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방자치체 간의 갈등, 국제적 신뢰성 및 국익에의 영향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일본정부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정책이 아닌 지침(指針)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권이 내건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향후 재검토가 예상되지만,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한일이 에너지 및 원자력협력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21세기의 한일 양국이 목표로 해야 할 에너지정책 및 원자력(안전) 정책 등 양국이 공유 가능한 공동가치의 제안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살리는 포스트 후쿠시마(post Fukushima)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2. 에너지협력: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너지믹스) 확립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에 수반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에너지 수급 등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원자력에 대한 재검토만이 아니다.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의 에너지 상황은 20세기와는 크게 변화했다. 원자력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에너지 상황의 변화 문맥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에너지에 관한 동향으로는, 에너지 수요의 대폭적인 증대가 전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한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2년판」의 요약(executive summary)에 의하면,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3분의 1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 60%는 중국, 인도, 중동에서의 수요증가이다. 또한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수요는 보합상태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석유, 석탄,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서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중에서도 전력 수요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전망 2012년판」에서는 2035년까지의 전력 수요의 성장은 에너지 수요 성장의 2배가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발전 방법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택의 판단재료는 이전보다 월등히 복잡해졌다.

2030년경까지는 화석연료가 계속해서 에너지원의 주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공급은 이라크 석유의 이용 가능성이나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의 실현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또한 화석연료의 이용 확대에 따르는 지구온난화에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석탄은 풍부하게 이용 가능한 자원이지만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석탄의 이용 정도는 ‘청정 석탄이용기술(Clean Coal Technology)’이나 ‘이산화탄소 포집(捕集)·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보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원자력은 20세기 후반 이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중심적인 에너지원으로써 경제적,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탈원전을 선택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계속 원자력발전 이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21세기에 원자력을 국가의 중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모색할지에 대한 문명사적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이용 담론에 대한 경제적 재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 이용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한 한중일 등의 원자력발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중일의 원자력발전 현황

자료: 세계원자력협회(10MWe, 2012년 2월 기준)

| | 운전 중 | | 건설 중 | | 계획 중 | | 합 계 | |
|-----------|--------------|-----------|--------------|-----------|--------------|-----------|---------------|------------|
| | 출력 | 기수 | 출력 | 기수 | 출력 | 기수 | 출력 | 기수 |
| 일본* | 4,464 | 51 | 276 | 2 | 1,377 | 10 | 6,117 | 63 |
| 한국 | 1,879 | 21 | 580 | 5 | 840 | 6 | 3,299 | 32 |
| 중국 | 1,188 | 15 | 2,764 | 26 | 5,748 | 51 | 9,700 | 92 |
| 합계 | 7,531 | 87 | 3,620 | 33 | 7,965 | 67 | 19,116 | 187 |

*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건설, 계획 모두가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 있음

[표 2] 세계의 원자력발전 현황

자료: 세계원자력협회(2012년 2월 기준)

| | |
|-------------|--|
| 운전 중 원자력발전소 | 총 443 기, 30 개국 |
| 설비 용량 | 370,373MWe |
| 주요국 | 미국(104 기), 프랑스(58 기), 일본(51 기), 러시아(33 기), 한국(21 기), 인도(20 기), 영국(18 기), 캐나다(17 기), 중국(15 기), 우크라이나(15 기), 스웨덴(10 기) |
| 건설 중 원자력발전소 | 61 기, 13 개국 |
| 설비 용량 | 61,654MWe |
| 주요국 | 중국(26 기), 러시아(9 기), 인도(6 기), 한국(5 기), 캐나다(3 기)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에너지믹스(에너지원의 조합, 전원 믹스)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은 2030년대에는 원전 가동률을 제로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수립해, 10%의 절전과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세 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1차 에너지원 구성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믹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한일의 에너지믹스(2010년)

| | 총량 (백만toe) | 1차 에너지원 구성(%) | | | | | |
|-----|---------------|---------------|------|------|-----|------|-----|
| | | 석유 | 석탄 | 가스 | 수력 | 원자력 | 재생 |
| 한국 | 260.5 | 40.1 | 29.2 | 15.7 | 0.5 | 12.2 | 2.3 |
| 일본* | 472.0 | 42.5 | 21.5 | 17.1 | 1.4 | 15.4 | 3.1 |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가동 중단된 원전을 대신해 일시적으로 가스발전 비중을 높임

일본은 원자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급속한 탈원전은 어렵지만, 단계적, 지속적인 ‘탈원전’ 정책에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 소비량은 세계 제9~10위 수준이며, 전력 소비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요 선진국보다 최대 10배 높은 수준으로, 1 인당 전력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선택한, 2030년대에 원전 가동률을 제로로 하는 혁신적 원전정책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과도한 원전의존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전력소비 증가가 계속될 경우, 전력수급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년간, 한국의 석유수입은 6% 이상 증가했고, 에너지소비는 3% 이상, 전력소비는 9%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약 신규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부재, 값싼 에너지 가격, 낮은 재생에너지의 활용도 등을 재검토하여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존의 ‘원전 의존’ 패러다임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력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화력발전소의 신규입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소비 증가를 관리해 이것에 최적화된 에너지믹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탈원전의존’ 사회로 이행하는 패러다임의 수용이 어려운 현실인식 위에서, 일본과는 다른 한국 고유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에너지믹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현 단계의 에너지 패러다임, 베스트 에너지믹스는 서로 다르지만, 양국이 장기적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 등을 달성하기 위해 ①에너지 저소비 사회,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 ②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기술혁신, ③세일가스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④동북아시아 지역 에너지협력체 모색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영역에서 한일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1) 에너지 저소비 사회,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협력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대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부족 국가의 향후 에너지정책은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 협력, 베스트 에너지믹스 구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에너지 개발 기술협력(스마트 그리드 등), CO₂ 배출량 삭감을 위한 기술협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도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의 협력은 '에너지정책실무협의회' 수준의 한정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어, 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서, 2030년까지 2010년의 전력 소비량의 약 10%, 최종 에너지 소비 베이스에서 약 18.5% 이상의 삭감을 내걸고 있다. 이 방침은 정부의 정식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신규 원전건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예상되고, 화석연료의 소비에도 비용, 온실가스배출 등의 문제에 의해 한계가 있어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해지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의 갱신, 최대전력 사용 시의 수요 억제를 위한 스마트 미터의 도입, 네가와트(Negawatts: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으로 얻어지는 잉여 에너지, 신생 에너지 자원의 개념) 거래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에너지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기술혁신, 경제성장과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본과 기술적, 정책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모색은 불가결하며, 일본에게도 수요구조나 기술수준이 비슷한 한국과의 에너지협력은 에너지 효율화기술에 대한 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2)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기술혁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 및 에너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한일이 협력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기술혁신은, 태양광 에너지의 연구개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등이 있으며, 공동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시민사회의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한일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그 외에 풍력발전, 수력, 지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 유기체를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 해양발전(조류(潮流), 파력(波力))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자연에너지)의 전면적 확대에 관한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해양발전은 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업권 문제 등이 해결되면 잠재성이 높을 것이며, 만일 한일이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으면 국제적으로도, 전략적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다.

일본은 2011년 8월에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로 생산된 에너지를 전력회사가 고정가격으로 매입해, 전기요금에 추가하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FIT: Feed-in Tariff)」의 실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입가격이나 매입기간, 송전선로의 접속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의 성립이 '탈원전의존'과 함께 태양광 발전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일본의 에너지 구조가 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즉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문제점(전기요금 인상에 수반하는 국민의 부담증가, 매입비용 가격 타당성의 문제 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일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시행, 에너지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의 성립 이후, 일본에서는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시바(東芝), 히타치(日立)조선 등 6사는 향후 10년간 1,200억 엔을 투자하여 발전능력 30만 kW급의 풍력발전소를 해상에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2030년까지 800만 kW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 제주도, 동해안 등에서 소규

모 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어서, 한일협력이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분야에서는 중국기업의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여 한중일 협력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3) 셰일가스, 셰일오일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협력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shale gas)가 중요 에너지원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셰일 가스는 천연가스와 거의 같은 성분이며, 지금부터 약 60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셰일 가스는 암석에 갇혀 있어 지금까지 생산이 어려웠지만, 최근 채굴기술의 발달과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등은 저탄소 녹색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셰일가스의 생산으로 천연가스 및 석유의 수입량이 감소해, 석탄가격 하락은 물론 천연가스 가격은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어 가스발전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즉 에너지 비용의 감소에 의해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지연시키는 등의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29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중 2개의 계획만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면에 가스발전 플랜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이에 258개가 건설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2009년 이래 셰일가스의 매장량 평가, 개발촉진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의 수행, 개발투자 촉진 등의 에너지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기업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공동개발, 해외에의 자본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셰일가스 양산에 수반하는 국제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셰일가스 개발국과의 에너지협력을 강화해, 「에너지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시켜 천연가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셰일가스 수입확대로 에너지의 중동 공급 의존도를 억제해 가스 도입의 다원화가 가능). 동시에 셰일가스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면에서의 협력도 요청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아키타(秋田) 현의 아유카와(鮎川) 유/가스전에서 셰일오일 채취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methane hydrate: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도 일본의 천연가스 사용량의 100년분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원의 개발에는 채산성과 기술적 가능성의 과제가 있어, 우선 향후의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한일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수급 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기존의 천연가스나 셰일가스의 공동확보 등의 적극적인 한일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일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국으로서 적절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4) 한일 에너지협력체 모색

한국과 일본은 석유, LNG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에너지 수입국이다. 따라서 양국 간 에너지협력의 체계화, 에너지 수급협력 등을 통해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중일(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장치의 관점에서도 국익과 연결된다. 한일은 에너지원의 수입 및 전력의 생산구조, 원자력 의존도 등에서 매우 유사한 에너지 구조 및 정책을 가지고 있어 양국 간의 에너지협력을 토대로, 가능하면 한중일 에너지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에너지협력체 구축을 시도해왔지만,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양국 모두 에너지를 자국 경제의 불가결한 기반으로 여기고, 에너지 자립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모두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에너지 자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환경이나 지역협력의 구조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우선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에너지협력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저케이블 건설 등을 통한 한일의 전력망 연결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비상시 에너지 수급을 위한 2국 간 혹은 지역협력, 석유, 가스 등의 공동구입 및 공동수송, 국가 에너지믹스 협력 등이 구체적인 협력 사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래에는 한일에 중국을 더한 한중일 에너지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한중일 협력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실효적인 협력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정

부 차원의 협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해저 케이블 건설 등에 의해 한일, 혹은 한중일 삼국의 전력망이 연결되면, 긴급 시 전원의 상호공급은 물론, 자연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거래할 수도 있어 자연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 전력망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면, 아시아의 슈퍼그리드 전력망이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한일이 검토해야 한다.

3. 원자력 협력: 원자력 안전협력의 제도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으며, 국경을 넘는 원자력 재해의 특성상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국제사회가 공동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2011년 5월, 한중일 정상은 「원자력 안전협력 합의 문서」에 서명해 원자력 안전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지만,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라는 선언적인 협력이 아닌, 실효성 있는 원자력 안전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원자력안전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원자력 안전의 강화를 위해 한일이 원자력 안전협력을 제도화하여, 원자력 안전을 국제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협력과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긴 과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원자력 안전협력의 제도화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원자력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원자력 수출에 있어서는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원전 안전기술, 신형 원자로 개발 등의 연구 개발, 안전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원자력협의회' 및 '원자력안전정보 교환회의' 등을 통해 2국 간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에 관한 2국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 있어 협력 가능한 영역으

로는,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국제적인 안전협력, 원전 사고시의 위기대응시스템의 공동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해 원전 안전정보의 교환, 원전 기술자의 양성, 원전 안전운전 매뉴얼의 공동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시의 방사성 물질의 확산 예측이나 주민의 피난방법, 저레벨 방사선량 피폭자의 건강관리 등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의 안전규제조직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 채택된 국제조약인 「원자력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조약(원자력사고 조기통보 조약)」 및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 시의 원조에 관한 조약」(원자력 사고 관련 2조약), 「원자력의 안전에 관한 조약」, 「사용후 연료 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조약」 등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서 상호 간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환경협력 분과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조약에 근거한 한일 상호의 긴급사태통보의 구체적 시행에 관한 양자조약의 체결을 검토하여 긴급 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재해에 대한 대비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오염수 처리 등의 해양오염 방지, 오염토 정화 등의 오염처리 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살리기 위한 한일의 협력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국이 협력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 정보의 공유와 원자력 발전 사고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간의 사고대응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원자력 발전의 상호 감시, 원자력 발전 사고시의 손해배상 등을 IAEA와 제휴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일은 평상시의 정보교환은 물론, 긴급시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조약의 구체적인 실시에 관한 한일 간의 양자조약이 체결된다면, 양국 간 상호의 긴급통보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양국 협력의 공고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협력의 틀을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3국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의 원전건설 계획을 가진 중국을 원전 안전

협력에 참가시켜, 한중일 3국 간(혹은 동북아시아)의 원전안전 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가 개발한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50기 이상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한중일이 원전 안전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일 간에는 2000년대 이후 이미 ‘원자력안전 규제자회의’, ‘원자력안전 정보교환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으므로, 향후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중일의 원자력 안전협력의 조약화·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며,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실무추진을 담당하는 한중일 원자력(원전) 협력 사무국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2) 포스트 후쿠시마(post Fukushima) 한일협력

핵무기, 원전 등의 원자력에 관한 안전보장은 원래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종래, ‘핵 안보(nuclear security)’라는 개념은 군사력으로서의 핵무기에 관한 문제로서, 원자력의 평화이용은 인정하면서 군사적 전용을 인정하지 않는 핵 비확산의 문제(nuclear non-proliferation)와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의 문제(nuclear safety)와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의 문제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요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사태가 절박했던 시기에는 당사국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사고로 확산한 방사능 물질이 비산(飛散), 표착(漂着)할 위험성이 높은 한국도 국가 안보적 레벨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주목하고 있었다.

2012년, 일본에서 원자력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원자력 이용의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구절이 새롭게 추가되어, 이 「안전보장」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둘러싸고 ‘원자력의 군사이용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개정은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않았지만, 일본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모두(冒頭)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이용은 평화목적에 한정한다”는 이념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혼란은, ‘안전보장’을 국민에게 있어서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했을 경우, 핵의 군사이용, 비확산, 원전

안전성의 모든 것이 ‘안전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핵 비확산을 우선시해 오면서도,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주체인 전기사업자의 책임으로 치부해 온 측면이 강했다.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 원전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원전사고는 ‘안전보장’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예를 들어 ‘냉각재 상실사고(LOCA)’에 취약한 원전에 군사공격이나 테러가 가해졌을 경우, 대규모 방사능 오염과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핵 비확산 체제에 있어서의 ‘핵 안보’의 문제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원자력 안전’의 개념을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동시에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해졌다.

이미 한중일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3국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정부, 국회, 민간에 의해 복수의 사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번 사고는 지진 및 쓰나미에 의해 일어난 것이지만, 사업자인 도쿄전력과 감독자인 정부의 ‘과혹(過酷)사고(severe accident)’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사고의 확대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상정(想定) 가능한 재해, 사고나 오조작에 대한 방호(防護)를 원자력발전소가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정부 혹은 원전 운전자의 안전문화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동시에 관계자의 이해관계도 존재해, 폐쇄적인 관리 체제에 빠질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안전규제 감독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인 상호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감시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지역차원에서의 상호 체크를 고려할 수 있고, 한일 간에 이러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의의가 크다.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다 안전한 차세대형(제 4세대형) 원자로나 소형 원자로의 연구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향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신형 원자로 개발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기술자의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일본에서 원자력 연구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협력을 양국 간의 원전 안전협력체제로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군사적 사용 금지)을 위한 협력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핵 비확산 조약이나 한미, 미일 원자력협정 등 다양한 국제 조약 및 공식성명에 의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체제의 준수를 약속해 왔다. 한일 간에도 2011년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협정으로 규정했다. 한일은 원자력협력 협정에 근거해 핵 비확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원자력의 이용은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여 핵 비확산 체제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핵연료 사이클의 취급이 한일 양국에게 중요하다. 종래, 일본은 핵연료 사이클 확립을 목표로 미일 원자력협정에서도 재처리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후,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진행되고 동시에 재처리로 획득한 플루토늄의 관리나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재검토 방향에 따라서 2018년에 갱신 예정인 미일 원자력협정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은 핵연료 사이클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14년에 갱신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핵연료 사이클을 둘러싼 문제는 미국과의 교섭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현재 한일 간에 구체적 협력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핵 안보’의 관점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이라고 하는 ‘원자력 안전’의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최소한 핵연료 사이클에 관한 양국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환경협력

1. 머리말

(1) 한일 간 환경협력 추진 의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지닌 한일 양국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이다. 양국은 공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된 중대한 환경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제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비경제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제성장은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 양국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이룬 양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이를 무시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야말로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이는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매우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적 과제다. 앞으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해양오염과 월경성 대기오염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를 비롯한 세계의 자원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구상의 희귀한 천연자원의 관리를 둘러싼 문제는 에너지 자원 등이 부족한 양국에서는 더욱 절실한 현실적 과제이다.

이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양국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제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이 정치, 안보,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의 협력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이 일상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관여

하게 되므로 한일 양국 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이 기대되기도 한다.

나아가 환경 분야 협력은 한일 양국이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구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시민적 가치 추구에 대한 양국의 책무를 알리는 데 적합하며, 뛰어난 민간기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환경 분야 활동에는 신뢰할 만한 과학지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과학기술 수준과 더불어 정보가 공개되고 지식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제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일 양국은 이 분야의 노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신뢰할 만한 나라로서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환경 분야 협력은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

(2) 환경문제의 다양성과 환경협력의 여러 유형

환경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강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환경 문제는 다양하며 그 성질도 각기 다르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우선순위나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영역도 적지 않아 양국 간 협력 방안도 환경문제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국 협력의 가능성이나 구체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고 현황에 기초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에의 악영향이 일국의 영역내로 그치는 환경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많다. 그리고 이는 주로 국내 정책이나 제도설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한 나라에 국한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이다. 이때 필요한 국제협력이란 주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포함하여 타국의 실천 방안을 학습하여 자국의 실천에 참고로 삼는 것이다. 단, 예전에는 한 국가의 국내 문제로 여겨진 환경문제가 과학적 지식의 발달과 인식 변화에 따라 국제적 환경문제로 재구성되는 일이 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나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이 그 전형이다.

둘째, 두 나라가 함께 대처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는 인접국 간의 월경성 대기오염과 같은 인접국 사이의 월경성 환경문제다. 서식지나 이동범위가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생물의 멸종 문제도 있다. 이 경우에는 원인제공국과 피해국이 달라 일방만으로는 대처가 어렵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인접한 두 나라를 넘어서 악영향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월경성 환경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틀을 넘는 지역적 차원의 대처가 요구된다. 이는 중국의 경제활동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의 월경성 대기오염(산성비, 황사, pm2.5), 지역해(地域海) 오염 등이 있다. 또한, 특히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위험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이 경우 동일지역 내의 국가가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정도가 국가마다 다를 때도 있다. 그러나 대기와 해양 등 국경을 넘는 물리적인 연관을 전제로, 통상은 원인물질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된다. 따라서 관계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월경성 환경문제는 한일 양자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지역 전체 특히 중국의 관여 없이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악영향이 일정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환경문제, 즉 글로벌 환경문제가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가 문제 발생에 관여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경우이거나, 어느 한 국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이다. 예를 들면, 전자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후자는 공해(公海) 오염, 공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멸종, 남극지역 환경파괴, 우주공간 오염 등이 있다. 이들은 글로벌한 차원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의 발생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대응 기술에 한계가 있으며 악영향이 공간상 또는 시간상 크고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최신 과학기술을 토대로 모든 국가가 방지에 힘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온실가스 중 하나인 CO₂ 배출에서 한일 양국 배출량의 합계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중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CO₂ 삭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추진 등도 한일 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 세 가지 분야의 한일 간 환경협력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일 간 환경협력에 관해 주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내 월경성 환경문제 대처이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월경성 환경문제는 그 성질상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만 비로소 효율적 대처가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투명성이 높은 협력 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지역협력의 틀을 선도하고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의 참여를 얻어내 동북아시아 전체의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린다.

둘째,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대응이다. 이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은 다르다. 그러나 효과적인 감축방법 모색과 적응문제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일은 가능하며 유익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다양한 국내시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여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일본도 기존 국내시책과 국제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에너지 효율화와 지구 온난화에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한일 양국의 ODA, 즉 환경 ODA에서의 협력이 다.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양국은 인도주의 및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기초로 원조정책을 전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러한 양국이 협력해서 환경 ODA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는 환경보호를 실현하는데 함께 공헌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이 함께 제고됨을 기대할 수 있다.

2. 지역의 월경성 환경문제 대응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산성비, 황사, pm2.5 등 월경성 대기오염, 해양표류 쓰레기 등 해양오염, 이동성 생물종의 감소, 원자력 사용에 따른 방사능 오

염 위험 등 다양한 월경성 환경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설립 이후, 국경을 넘어서는 지역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포함한 관계국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월경성 환경협력이 등장했다. 한편, 그것들이 현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실천적 관점에서 더 유효한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존 국제법규범이 하나의 축이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1) 문제 인식과 비전 공유의 필요성

한일 간의 월경성 환경협력의 대전제로서 우선,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월경성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월경성 환경문제의 존재 또는 존재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월경성 대기오염으로 산성비, 분진(황사, pm2.5, pm21, 에어로졸, 블랙 카본 등), 광화학 스모그 문제, 동해 표류 쓰레기 등 해양오염, 원자력 사용에 따른 월경성 방사능 오염 위험, 어업자원 중 일정 종류의 해양생물종 (붉은 바다참게 등)의 자원상태 악화, 철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의 감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반드시 공통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깊은 인식을 공유해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전형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산성비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나, 사실 일본 국내에서 산성비 피해는 명확하게 관측되지 않는데 비해, 한국은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분진과 광화학 스모그의 월경 피해를 지적하는 과학자가 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국제적인 공통인식은 없다. 양국 모두 자국 내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공통의 영향 지표에 근거한 공동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처럼 공동대처가 필요한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애초에 협력 출발점의 대전제가 빠져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먼저 이 점을 주시하고 공통의 영향 지표에 근거한 진정한 의미

의 공동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을 적극 추진하여, 발생가능성이 지적된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해 과학적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정부는 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월경성 환경문제에 관한 기존 협력의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한 월경성 환경문제를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라는 더 광범위한 지역의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일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더 넓은 시야에서 환경문제와 협력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 광대한 사막을 보유한 몽골, 최근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등이 존재한다. 예컨대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이 이들 나라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맞는 위치에 있어, 양국 공히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주변국, 특히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월경성 환경협력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한일 양국은 기존 협력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선택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연관에 착안해 일본에서 제창되고 있는 동시저감효과방식(Co-benefits형)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서 장기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상기 측면에 대해 충분히 유의하면서 월경성 환경문제 대처에 관한 공통 비전을 구축하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 우선순위와 전략을 명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효한 협력체계의 설정과 이를 통한 운용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때 실천적 관점에서 기존 협력방안을 검증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따라 이를 재구성하는 일도 요구된다.

(2) 기존 협력의 검증: '대화'에서 '행동'으로

동북아시아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포함한 국제협력이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여럿 존재한다. 다양한 환경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주된 포럼으로서 한일 양국 간의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정(한일 환경보호협정)」(1993년)에 근거한 '한일 환경보호협력합동위원

회'(1994년~)가 있고, 한중일 3개국 간에는 한국이 제창한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1999년~), 동북아 6개국 간에는 한국이 제창한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1993년~),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에는 '환동해환경협력회의'(NEAC)(1992년~),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에는 일본이 제창한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1991년~)가 있다. ASEAN을 포함하면 '동아시아정상회의환경장관회의'(EAS-EMM)(2008년~), 'ASEAN+한중일환경장관회의'(2002년~)가 있다. 개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오염에 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의 한중일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서태평양지역해행동계획(NOWPAP)(1994년~),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일본이 주도하여 한국과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1998년~) 및 한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사업(LTP)(1996년~)', 유해폐기물 국제거래에 관한 '유해폐기물 불법 수출입 방지에 관한 아시아 네트워크(2003년~)' 등이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여러 협력사업이 병행해서 계속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은 물론이거니와, 다수국 간 협력사업 대부분도 한일 어느 한 쪽이 제창하여 실현했다. 또한, 개별 사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일 양국이 재정적 공헌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적극 관여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들에 근거한 동 지역의 월경성 환경협력을 특히 지역의 월경성 환경협력이 활발한 유럽국가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한일 2개국 간의 협력을 제외하면, 조약 등 법적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 ②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수반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대화 또는 정보교환이 중심이라는 점, ③장기적 비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협조적 행동을 요구하는 구조가 불충분한 것이 많다는 점, ④국제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인정되지 않고 운용상의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점, ⑤복수의 협력사업간에 실질적인 상호연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현 단계에서 이와 같은 협력사업의 현실적인 유효성-개별 사업이 애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단,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함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처하고자 하는 월경성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공통인식의 부족이 근본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상기 특징이 소극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을 포함한 관계국 간의 주도권 다툼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협력사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의 지적이 일반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1990년대에 한일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월경성 환경협력이 등장한 지 이미 20년 가까이 지났다. 한일 양국은 기존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지불했고 오랜 세월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대화와 정보교환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그 성과가 문제해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적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그간의 성과를 대화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진 많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월경성 환경협력에 관한 그동안의 성과를 정치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향후 대응방안의 본격적인 검토-이는 기존 협력사업의 재구성을 수반하는 것일 수 있다-를 진지하게 생각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열쇠를 쥐는 것은 전술한 한일 양국의 문제인식 및 비전의 공유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의미 있는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중요하다. 한일 양국은 서로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기존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면서 그 재구성을 시야에 넣은 통합적 전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협력사업의 검증과 현실적 선택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절차 면의 월경성 환경협력의 추진: 국제규범화 가능성

월경성 환경협력에 관한 최근 국제규범의 전개는 한일협력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을 시사한다. 즉, 다양한 월경성 위험활동-타국에 물리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활동- 또는 긴급사태-타국에 손해를 끼치거나 매우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태-에 대해서 그 관할국에게 일정한 절차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현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월경성 위험활동에 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관할국에서 잠재적 피해국에 대한 해당 활동허가 또는 사전통보 및 해당국과의 협의, 긴급사태의 통보, 환경 위험과 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공표, 정보교환 등을

포함한 절차의 시행이다.

한일 양국이 체약국인 조약 중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 해양법 협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해양투기 규제 런던협약)」, 「원자력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원자력사고 조기통보 협약)」,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원자력안전협약)」,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생물다양성협약)은, 이들 절차 중 몇 가지를 실시하고 촉진할 것을 체약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이들 절차의 일반적인 중요성은 리오선언(UNCED에서 채택)에도 명기되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월경성 손해방지 조문 초안(2001년)도 이들 절차를 시행하는 의무를 핵심으로 하여, 월경성 손해발생 방지와 그 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월경성 위험활동에 관한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통보 및 협의와 같은 사전절차 시행 의무의 불이행을 쟁점으로 하는 국제환경분쟁도 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시행에 관해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데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우루과이강 펄프 공장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2010년)). 국제관습법 상, 긴급사태의 통보 의무는 확립되고 있어, 사전절차 시행 의무도 조금씩이나마 형성되어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상기 절차는 월경성 환경손해 발생방지 또는 위험 최소화에 공헌하는 동시에 관계국 간의 국제분쟁 발생을 피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관계국 간에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1990년대 이후, 위와 같은 절차는 국제사회에서 월경성 위험활동이나 월경성 긴급사태에 관한 관할국 권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월경성 환경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기 절차에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것-관련정보 공개, 의사결정 시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하도록 관할국에 대해 요청하는 조약도 늘고 있다. 투명성 높은 절차를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향상을 추구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그러나 조약을 통해 상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식화하는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유럽지역과 아시아지역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전자에는 전술한 다자간 조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접국의 양자 간 조약이라든지, 월경성 위험활동 전반에 관한

절차 시행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포함해 규정하는 조약이 있다 (전형적인 예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월경성환경영향평가조약(1991년)이다). 반면, 후자에는 그러한 예가 거의 없다. 한일 양국 간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정한 조약은 커녕, 절차의 시행을 명시한 비구속적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일 양국 모두 체약국인 유엔 해양법조약, 전술한 원자력관련 세 조약, 생물다양성조약은 일반적인 형태로 절차의 실시 의무 또는 촉진 의무를 명기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약에 근거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절차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할국에 부여된 재량권을 제약하며 관계국 간에 실무적 편의를 도모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절차의 유용성과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절차의 구체적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적어도 전술한 다자간 조약이 정하는 절차시행 의무에 대해 일반적 내용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자 조약 체결, 나아가 범지역적 조약 체결을 위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동북아지역의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 도입 추진을 목표로 계속하고 있는 대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 전술한 UNECE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약과 같은 사전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다자합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한일 간의 관련 국내법규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월경성 환경영향 평가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긴급사태의 통보 의무에 관해, 특히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협약이나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의무내용을 구체화하는 일이 단기적으로 유효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모델은 특히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협약에 관한 예로서 유럽에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국 간 조약은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조약의 체약국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실무상의 배려 차원에서 절차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돕는 것이며, 관계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현을 위한 장벽이 낮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조약의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문서로 출발해, 장차 조약형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월경성 환경문제를 더 넓은 지역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양자체제를 중국 등을 포함하는 다자체제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2008년 이후 한중일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중일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 협력 분과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이는 원자력안전 협력분야에서 ‘포스트 후쿠시마 한일협력’이라는 맥락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방향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일본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관련정보를 직접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교훈을 얻었다. 이 점에서도 한일 양국이 긴급사태 통보에 관한 실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은 동북아시아의 월경성 환경협력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의 형태로 실현되면, 동북아 더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중요한 선례로서 장차 월경성 환경협력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양국이 함께, 국제사회에서 이미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미 이외의 지역에서 귀중한 선례를 확립한다면, 세계에 그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절차 면에서 공중참여 추진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함께 높이게 될 것이다.

3.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문제의 현황과 한일 대응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현재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후자에 의한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기후변화 문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구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PC)’ 제4차 보고서(2007년)에 의하면, 2005년까지 100년간에 세계 평균 기온이 0.74(0.56~0.92)°C 상승하고 평균 해수면이 20세기 중에 17(12~22)cm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나 광범위한 설빙의 해빙현상 등을 볼 때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고 거의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장래 예측으로서 1980년~1999년에 비해 21세기 말(2090년~2099년)의 기온이,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양립하는 사회를 가정할 경우 약 1.8(1.1~2.9)°C, 화석 에너지를 중시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사회를 가정할 경우에는 약 4.0(2.4~6.4) °C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각각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과 억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 정부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실가스감축센터’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입법예고하였고, 2015년 1월 제도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동안 모든 업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기로 했다. 현재는 온실가스 다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나, 배출 감축 수준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 하에 새로이 설립되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2년 10월 20일 2차 이사회에서 기금사무국 유치국가로 선정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선진국이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이다. 기금 설립은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자총회(COP16)에서 합의되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하에서 수치목표를 수반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제정, 수차 개정)을 바탕으로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 (2005년 책정, 2008년 변경)에 따라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와 같은 정책 혼합을 활용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대책으로서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작하였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중소수력 발전,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전량을 매입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환경세로는 지구온

난화대책세가 2012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단, 국내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자주참가형 국내배출권거래제도(JVETS)’(2005년 개시)에 이어, 2008년에는 ‘배출량 거래의 국내통합시장의 시범실시’(자주참가 및 목표설정 방식)가 시작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도입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산업계의 반대도 존재한다. 산업계는 일본에서 이미 에너지 효율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대폭적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가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는 기존 방침이 수정되고 있어,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의 달성 전망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2)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국제적 책임

2011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의 전 세계 CO₂ 배출량 비중을 보면, 중국 28.6%, 미국 16.0%, 인도 5.8%, 러시아 5.4%, 일본 3.7%의 순이며, 한국은 1.8%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은 세계 5위, 한국은 세계 7위의 CO₂ 배출국으로서, 양국 모두 세계 10위권 내의 다배출국이다. 특히 한국은 1990년 이후 15년 만에 두 배 이상의 배출량을 기록하였고, 배출량 순위 역시 2008년 세계 8위에서 2009년 세계 7위로 상승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출 증가율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 양국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험에 빠르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협상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은 상이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 상 일본은 부속서 I국으로서 수치목표를 수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와 같은 감축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일본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배출국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책임을 분담하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 나라에 한국도 포함되므로 당분간 공조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국제협상은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지 않는 2차 공약기간(2013년~2020년)에 이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배출국의 참여를 포함한 새로운 틀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서로 얽힌 이해관계를 전제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일 양국은 상이한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제협상에서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른 이상,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종료 후의 국제제도 구축과 관련해서 당분간 적극적인 협력은 쉽지 않으나, 한일 양국이 여타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노하우 공유,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 기후변화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동 학술조사 및 적응대책,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관한 공동 기초조사 등에서는 환경협력을 통해 한일 복합 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과 의제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에 관한 협력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10월부터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국제법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높으므로 양국 모두 이 문제에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양국 모두 에너지의 국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조건도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에너지 안전보장이나 산업정책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는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는 양국 모두 대체로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산업계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정부의 온난화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반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한일 양국이 각각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고 이들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얻은 제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정책협력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원자력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정책, 에너지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노후화된 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와 더불어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매우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위험과 원전의 안전성 위험 간

의 상충 가능성과 더불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모색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양국이 각각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의 전문가 그룹 차원에서 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다양한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②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기술 등에 관한 협력

에너지 효율 개선은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매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이와 관련한 기술협력, 이를 촉진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동 연구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관련하여 분산형으로의 에너지 공급 방식 변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형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학술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태양광, 풍력, 해양(조류·파력) 등에서 양국의 기술 수준과 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세계를 대상으로 주창한 '세계 저탄소 비전'에서도 저탄소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일본의 기술 및 경험 공유와 정책 대화 및 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한국의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GGI)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에 어떤 경제적 유인을 주는 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고정가격매입제도와 같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시행해 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1년에 이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이용 전력량 중 일정량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FIT가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 설정의 어려움, 보전 규모의 예측 및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이 폐지의 이유였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에너지발전법)”에 의거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 7월부터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그간의 제도 운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양 제도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양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공유하는 작업은 양국의 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공동 학술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피해(인명, 건강, 농축산물 등)와 재난(가뭄, 홍수, 해안지역 침수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정보 공유,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영향에 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적응 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와 이에 기초한 한일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양국 간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④ 동북아 슈퍼그리드 가능성 모색

국가 간 전력망이 연결된 유럽과 달리, 한일 양국은 전력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변 국가들과 전력을 유연하게 거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최근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국제 송전망인 슈퍼그리드로 연결해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몽골 등 동북아 국가가 공유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의 사용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외교적 및 환경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한일 양국 간에 이에 관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일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환경 공적개발원조 (ODA)

(1) 한일 ODA 현황

2000년 유엔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에는 8개 목표 중 하나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이 설정되어 있다.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층은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후불의 (Climate Injustice)'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자체 실행능력과 자금력, 기술력 및 관련 인프라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개도국이 종래 방식대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구 온난화의 폐해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환경보전은 개도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세계은행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개도국의 적응비용으로 2050년까지 연간 750억~1,000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동아시아의 적응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부문별로는 인프라 구축과 해안지대 적응비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듯 환경 ODA에 대한 수요는 지대한 데 비해 ODA 공여국의 원조역량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주요 ODA 공여국의 원조가 동일한 수원국에 중복 공여되는 경우도 있어, ODA 효율화를 위해서도 한일 환경 ODA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북아에서 선진국 ODA의 조정체제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은 한국과 일본 둘뿐이며, 양국은 공히 환경 ODA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DAC 회원국 중 총ODA 대비 환경 ODA 비중이 56.3%(2009-2010 평균)로 DAC 평균의 두 배가 넘는 환경 ODA 최대 공여국이다. 한국의 환경 ODA 규모는 아직 일본에는 못 미치나, 환경 ODA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 2008년 이후 연평균 35%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9~2010년에는 2007년 대비 총액이 2.3배 증가하여 총 ODA 증가율(연평균 20%)을 크게 웃돌았다.

(2) 한일 환경 ODA 협력 방향과 의제

①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협력

DAC의 자금배분은 일부 선진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아프리카 등 비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대아시아 지원 강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인 동아시아의 압축 성장이 초래할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온실가스 다량배출형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이익에도 합치된다. DAC내 유일무이한 동북아 소속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국익도 공유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2012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였다. GCF는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불 규모의 장기자금 확보와 이를 통한 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각국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나,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기후불의' 예방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GCF가 조기 정착하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GCF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첫째,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자원순환 사례를 GCF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친환경 기술에 대한 R&D에 대해 한일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GCF의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한일협력이다. 넷째, GCF의 거버넌스 구축 및 사무국의 인적 구성 등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일 양국에 중국을 포함한 고위급 포럼 정례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② 한일 공동의 동아시아 환경 파트너십 프로그램

한일 양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2008년~2012년까지 총 2억 달러를 투자하여 10개국에서 물 관리, 저탄소 에너지, 산림, 폐기물, 저탄소 도시 등 5대 중점분야 17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한국의 환경 ODA 수원국이다. 단, 적은 재원규모로 인해 몽골, 필리핀,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대규모 물관리 사업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쿨 어스 파트너십(Cool Earth Partnership)'과 '하토야마(鳩山) 이니셔티브'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100억 달러 이상이 이 사업에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국은 한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이 일본의 환경 ODA 수원국 상위 10위권에 들어 있다.

이상의 실적을 감안하여, 그 후속작업 추진 시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양국이 각기 추진 중인 유사한 두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한정된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조 전체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원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자국이 경제개발 단계에 있어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소위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기반을 둔 협력도 검토할 수 있다.

③ 무상원조 부문의 한일 환경 ODA 협력

한국의 환경 ODA 최대 수원국은 탄자니아, 가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이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2개국으로 지역별 편중 현상이 보인다. 이들 수원국의 총 ODA 중 환경 ODA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제르바이잔(95%)과 가나(89%)이다. 일본의 환경 ODA 수원국은 수원 규모 면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라크, 태국의 순으로 이어져 이라크를 제외하고 모두 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국가다. 총 ODA 중 환경 ODA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제르바이잔(99%), 터키(99%), 인도(98%)로 모두 거의 100%를 차지한다.

양국의 지원 대상국을 비교해 보면, 개별 수원국 지원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일본의 최대 수원국에의 지원 규모는 한국의 70배가 넘는다. 또한 양국의 환경 ODA 수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공히 상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ODA는 현재 유상 대 무상 비율이 약 6:4로 2015년까지 이를 유지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구노력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비교적 적은 기금으로 대규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이유와 더불어 자국 자본재 수출기회의 확대, 천연자원 등의 안정적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원국

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동시저감효과방식(Co-benefit형)의 비율이 높다. 즉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동시에 자국기업의 진출발판을 마련해 주고 신뢰조성 확보도 추구하는 식이다. 그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약 80%가 유상자금이며 민관협력(PPP) 방식을 선호한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환경 ODA 상위 10대 수원국

| | 총 ODA 상위 10대 수원국 (2009년 기준 백만불) | | | | 환경 ODA 상위 10대 수원국 (2009년 기준 백만불) | | | |
|----|------------------------------------|-------|-------------|--------------|-------------------------------------|-------------|-----------|--------------|
| | 순위 | 수원국 | 총 섹터별 배분 | 환경ODA (%) | 수원국 | 총 섹터별 배분 | 환경 ODA | 환경ODA (%) |
| 한국 | 1 | 베트남 | 282 | 7 | 탄자니아 | 87 | 27 | 31 |
| | 2 | 필리핀 | 131 | 11 | 인도네시아 | 123 | 26 | 21 |
| | 3 | 인도네시아 | 123 | 21 | 가나 | 27 | 24 | 89 |
| | 4 | 탄자니아 | 87 | 31 | 베트남 | 282 | 20 | 7 |
| | 5 | 방글라데시 | 82 | 20 | 몽골 | 31 | 17 | 55 |
| | 6 | 모잠비크 | 62 | 0 | 방글라데시 | 82 | 16 | 20 |
| | 7 | 캄보디아 | 53 | 3 | 스리랑카 | 42 | 16 | 38 |
| | 8 | 앙골라 | 45 | 0 | 필리핀 | 131 | 15 | 11 |
| | 9 | 스리랑카 | 42 | 38 | 아제르바이잔 | 15 | 14 | 95 |
| | 10 | 아프간 | 41 | 0 | 에콰도르 | 7 | 4 | 62 |
| 일본 | 1 | 인도 | 1968 | 98 | 인도 | 1968 | 1905 | 98 |
| | 2 | 베트남 | 1214 | 47 | 인도네시아 | 1096 | 673 | 65 |
| | 3 | 인도네시아 | 1096 | 65 | 베트남 | 1214 | 555 | 47 |
| | 4 | 이라크 | 684 | 76 | 이라크 | 684 | 513 | 76 |
| | 5 | 필리핀 | 328 | 8 | 태국 | 548 | 461 | 89 |
| | 6 | 태국 | 548 | 89 | 터키 | 381 | 374 | 99 |
| | 7 | 방글라데시 | 474 | 23 | 케냐 | 385 | 268 | 72 |
| | 8 | 아프간 | 287 | 3 | 이집트 | 247 | 219 | 93 |
| | 9 | 케냐 | 385 | 72 | 아제르바이잔 | 179 | 176 | 99 |
| | 10 | 터키 | 381 | 99 | 파키스탄 | 209 | 163 | 81 |

자료: OECD(2012)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March 2012)

이처럼 양국의 환경 ODA는 그동안의 역사, 규모,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 분야의 협력 모색이 용이하지는 않다. 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환경 ODA 중점 대상국이다. 이들 나라에서 기업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유상원조는 제외하고, 기술협력 등 무상원조에서는 ODA 기본 프로세스인 개발조사 → 제도구축 → 능력배양 → 자금협력 과정에서 협력 여지가 있다. 예컨대 개발 조사 시 개도국의 환경주류화 및 전략수립을 위한 공동조사는 비교적 협력 가능성이 크다.

④ 기후변화 관련 계몽·홍보 활동의 협력

한국과 일본은 환경 ODA를 추진하면서 원조와 관련된 대내외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계몽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직접 맞닥뜨리는 지점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협력이 수월할 것이다. 이는 크게 양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활동과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 모두에서 한일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는 점차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될 중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 계몽·홍보 활동 중 특히 집중해야 할 것이 지구촌 공동체 의식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한 초중고 교과과정의 환경교육 콘텐츠의 공동개발이다.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계몽·홍보 활동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강사 파견 등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개도국은 대체로 개발과 성장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 초기부터 환경친화적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지구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의 위험성 등을 과학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에서는 국가 간 정치적 대립과 상대적으로 연관이 미약하여 협력이 수월할 것이다.

VI. 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구축

1. 머리말

한일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조건은 엄중하다. 세계경제는 2008년 리만쇼크와 함께 백년에 한번 오는 위기를 겪은 후 곧이어 그리스 국가채무위기가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전화되면서 또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유로권 중심국인 독일마저 실물경기의 위축이 뚜렷하다. 위기를 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주요국 정상은 여러 처방전을 쏟아냈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근원적인 수술과 재할까지 긴 세월을 요한다.

이렇듯 유럽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한 한편 미국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은 2008년 위기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유럽의 침체가 파급되면서 2013년 GDP 2.4%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침체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8%를 넘고, 경기자극을 위한 정책수단이 소진된 상태다. 또한 유럽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위험도도 높다. 대규모 재정삭감 계획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미국경제의 장기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중국경제의 예상외로 빠른 추격으로 2020년경 미중 간 GDP 역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모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시장의 경기침체와 수요감소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상황에 있다. 또한 경기부양과 재정위기 탈출을 위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들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온 엔화의 평가절하가 본격화됨으로써 일부 신흥국 통화의 절상 압력은 증대되고 있다. 중국 인민폐의 충분한 국제화가 진전되지 않는 속에서 중국이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평가절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신흥국 통화의 환율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수요를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에서 찾는 일종의 재균형(rebalancing)이 필요하며, 우선 실물경제에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지역을 단위로 한 초국가적 산업축적과 국제

분업에 따른 네트워크 무역의 확산, 심화하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생산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해 온 주체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다. 이들은 역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입지와 부존자원을 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양국은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역내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일 양국은 사회 내부적으로 다수 공통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소득 불균형의 심화이다. 유례없는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균등한 성장을 이룩한 양국경제는 지구화의 급속한 추세 속에서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노인층과 아동의 빈곤률이 OECD 상위권이며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불균형은 OECD 3위이고, 일본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율의 경우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하위권인 8.4이고 일본도 OECD 국가 평균인 31.3을 하회하는 28.8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의 소득불균형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인구변화는 양국의 경제적 기초조건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령국가이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최고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동력 공급에 제약을 보이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적자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200%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사회보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계부채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공히 산업공동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제조업은 생산비용의 증대로 말미암아 점차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고,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고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이중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양국은 외자유치도 필요하지만 자국계 다국적기업의 자국 잔류 혹은 자국 유치에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할 처지이다.

끝으로 양국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부족, 수자원 부족, 식량 및 광물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환경문제 등 여러 환경적인 제약요건과 마주하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이 마주친 이러한 도전요인들은 양자 간 협력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사실 지역 차원에서 지난 십 수 년 간 다자협력체를 건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조정과 고용조정에 따르는 비용, 역내 국가 간 상호신뢰관계의 부족, 역외 국가 미국에 대한 이견 등으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재균형은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시장기능 확대를 위한 개방과 자유화 모델로는 21세기 경제의 복합적 문제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성장 패러다임은 여러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면서 수정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간 세상을 품미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지구촌에 전반적 성장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국제적으로 거대한 불균형을 야기하였고, 기존 거버넌스의 약화로 이어져 국지적 위기가 체계 전반적 위기로 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가 부활하여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대안에도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의 이룩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일정한 효용성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개방적 지역질서를 통해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향유해온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모델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는 경쟁을 통한 성장이란 목표와 함께 협력을 통한 공생과 공영의 가치를 중시하는 복합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GDP 성장에 대한 의식을 넘어서서 소득격차, 저출산 고령화, 자원고갈 및 환경파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엄존하는 전략적 불신의 벽을 넘어 공생의 네트워크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적 고려사항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냉전의 완화, 붕괴와 함께 등장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필두로 하여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ASEAN+3 정상회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틀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발족하여 다양한 경제문제들을 논의하는 제도적 틀로 기능해 왔다. 이와 함께, 개별 경제부문의 협력체도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향하여 2000

년대 초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양자 간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로부터 다자화 단계(CMIM)로 이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ASEAN+3 경제리뷰 및 정책 대화(ERPD: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에 더하여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와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치함으로써 역외의 충격에 대한 대응장치가 확충되고 있을 뿐 아니라 ASEAN 및 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 지적 공헌을 위한 장치도 강화되었다.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는 역내외 국가들 간에 촘촘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및 한-ASEAN, 일-ASEAN, 중-ASEAN, 인도-ASEAN처럼 단일국가와 다자협력체 간 FTA들이 체결되었고, 나아가 한중일 FTA,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등 보다 많은 회원국을 엮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중대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이다. 즉, 기존 협정에 대한 실질적 활용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CMI는 역내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장치로 설립되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그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CMI를 이용하지 않았다. CMI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한도도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이른바 IMF 링크(link)로 인해 IMF와 거래해야 하는 데 따른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 속에서 2009년 CMI의 다자화 합의가 이루어져 신용규모를 1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의결권 배분을 정함으로써 지역다자제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링크는 여전히 존속되어 위기국가는 일정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IMF와 협의 후 CMIM의 신용을 할당받아야 하며 IMF의 이행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IMF의 장벽에 따른 활용의 제한은 여전히 있다.

무역의 경우,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무역특혜협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십수 년간 역내외 국가들과 경쟁적으로 양자협상을 벌이고 있다. FTA 체결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100건을 상회하고 있으나, 그 74%가 양자협정이다. 문제는 양자협정들의 내용이 서로 다를수록, 자유화의 일정 차이가 날수록 FTA의 장점이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즉, 배제에 따른 특혜적 이익은 줄어들고 대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누들볼(noodle bowl) 효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 FTA의 다자화 논의가 나오게 된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중일 FTA, 지역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다자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제도는 실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이면에 작동하는 국내정치적 요인 역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대외개방은 국내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예컨대, 관세장벽의 철폐 혹은 국제금융거래의 자유화 정도에 따라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등장하며, 이들 간의 분배/재분배 정치가 전개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커지게 된다. 실업 증가 등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 비경쟁부문의 조정부담이 증대되고 이들이 개방반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구미시장에 대한 재균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대외협상에 대한 국내적 반대가 증대되는, 내향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포괄적 개방에 특히 민감한 국내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저하될 수 있다. 역으로 양국이 동아시아 질서 건축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걸림돌을 넘어서 지역의 이익을 지향하는 외향적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들은 경제거래가 수반하는 전략적 효과를 염두에 둔 국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을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 무역을 통제하여 상대국을 견제하거나 무역을 확장하여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한국, 중국 등 주요 국가 간에 양자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내 전체적인 자유화를 가져온 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로 다른 FTA가 병존함에 따라 누들볼 효과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최근 TPP, RCEP, 한중일 FTA 등을 둘러싼 지역협력의 주도권 경쟁이 다자협력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제한이나 2012년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의 종료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경제적 거래가 영향을 받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넷째, 현존하는 다양한 통합시도들은 건축(architecture) 문제를 담고 있다. 구성원 이슈로서, 지리적 영역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협력체를 추구하는 입장과 미국 등을 포함한 지역횡단적 구성원을 담는 협력체를 추구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또한 이슈 범위의 문제로서 경제의 다양한 영역을 어느 정도 협

정에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근한 예로, 현재 FTA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네트워크 경쟁은 협정 구성원의 범위, 이슈의 범위를 놓고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체결을 필두로 홍콩, 마카오, 대만과 협정을 체결한 후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지리적 동아시아 국가들을 엮고 있으며 자유화의 정도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TP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태지역을 단위로 고수준의 21세기형 FTA 모델을 적극 주창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경합하는 네트워크 경쟁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진정한 경제적, 사회적, 전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플랫폼을 설계하여 세력 경쟁구도를 공생/협력구도로 변환시키는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역 경제질서 건축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면서, 국내정치적 대립과 대외 전략적 고려가 상호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협력이 지역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생의 지역질서가 건축될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아키텍처의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新) 아키텍처는 시장주의적 플랫폼 혹은 시장경쟁과 협조를 통한 부강(富強)을 넘어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플랫폼 혹은 표준을 담아야 한다. 즉, 근대적 경쟁과 협조, 탈근대적 공생을 복합하는 신(新)자본주의 표준이 그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공생과 공영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근대화 국가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을 가장 먼저 경험한, 따라서 타국에 교훈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한국 역시 다음으로 혹은 특정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선구적 경험을 한 국가로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교훈과 귀감이 되는 사례이다.

이상과 같은 플랫폼 하에서 동아시아 경제아키텍처는 무역·투자, 거시 금융, 개발협력 등 세 분야에서 설계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키텍처 설계는 ①상호보완적인 동시에 경합적인 한일 양국경제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과제, ②지역의 공생을 위해 역내 격차해소를 하는 과제, ③끝으로 한중일 삼국 간 경쟁이 엄존하는 속에서 전략적 요인이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적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경쟁적 구도를 협력적 구도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담고 있다.

3. 협력 전략

(1) 무역 투자

동아시아에서 지역단위의 FTA 구축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국과 FTA 체결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5월, 한중 양국은 양자 FTA의 교섭을 시작하였고, 2013년 2월에는 한중일 FTA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ASEAN+6이 참가하는 RCEP은 2013년 5월 교섭을 시작할 것이다. 중단된 한일 FTA 교섭도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양자 간 동시다발적 FTA 전략은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철폐를 보다 빨리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왔다. FTA를 통해서 수출 경쟁상대국보다 앞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 인해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고, 무역자유화에 주저하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을 통해 국내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자세에서 일본이 배울 점이 크다.

현재진행중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지금까지 관세철폐에 주안점을 두는 양국 간 FTA와는 다른 면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국제분업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단위의 분업으로부터 생산공정 또는 태스크 단위의 국제분업으로 크게 변모했다. 기계산업 부문에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은 여타 다국적기업과 함께 새로운 국제분업을 통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선도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한국기업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중국뿐만 아니라 ASEAN을 포괄하는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다.

기계산업과 같이 국경을 넘어 분산된 생산공정·태스크 간의 치밀한 조정이 요구되는 국제분업을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정책환경이 필요하게 된다. 관세조치와 같은 종래의 통상정책과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각국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생산블록을 연결하는 서비스 링크이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FTA는 이상과 같은 정책환경의 실현을 위해 국제규칙 혹은 규범을 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FTA는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까지 더해져,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제조업 기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중소기업은 일본 국내에서도 고용과 생산을 창출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세계화가 주로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활용되려면 새로운 국제정책규율의 확립이 불가결하다. 특히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요컨대 향후 동아시아가 추구해야 할 FTA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역내 국제분업형태를 지지하는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구축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 질서는 역내 선진국과 대기업과 함께 신흥국, 개발도상국도 참가하여 책임 있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할 때 정치·안전보장 면의 협력저해요인을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화할 수 있다.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일 FTA와 병행하여 국제 규칙 제정에 주안을 두는 ASEAN을 포함한 RCEP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는 고수준의 관세 철폐를 지향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역을 촉진하는 원산지 규정, 비관세조치 철폐, 무역원활화, 생산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투자의 자유화·원활화,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FTA에 더하여 경제개발을 염두에 둔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인프라 개발, 법제·경제제도 정비, 중소기업 진흥, 혁신능력의 향상 등이 그것이다. 한일 양국은 FTA와 개발어젠다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은 농업에 관한 국경 조치 철폐의 결의를 표명하고, 경제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양국 간 FTA 체결의 경험을 살리면서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규칙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FTA는 개방이 수반하는 소득격차의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목표와 정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리만 쇼크 이래 세계금융위기는 세계전체 무역을 대폭 축소시켰으나 동아시아경제는 역동적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확대, 심화시키면서 지역경제에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향후, 유로권 위기를 포함하여 역외로부터 경제위기가 닥

쳐올 위험성은 상존한다. 이에 대하여 내향성을 극복하고 외향적이고 개방된 형태의 연결성을 충실화함으로써 역외 쇼크에 대한 내성이 향상된 지역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규칙은 지역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 선행국 간 연대를 형성하고 다자틀 속에서 사안별 접근을 통해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대상범위확대 및 위조품 거래의 방지에 관한 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이 바로 그 예이다. 산업 집중도가 높은 한일 또는 한중일은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2) 거시 금융

1997년 아시아통화 위기를 경험하고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ASEAN+3(한중일))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하에서 통화위기관리와 통화위기 예방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지역통화협력을 구축, 강화하여 왔다. 역내에서 통화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화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호 자금을 융통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고, 그 총액은 점차 증액되었다. 2010년 CMI의 다자화(CMIM: CMI-Multilateralization) 계약 발효에 따라, 각국의 공헌액의 총액이 1200억 달러로 증액되어, 2012년 5월에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2400억 달러로 배증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또한 CMIM에 의해서 과거 CMI의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네트워크가 다자 통화 스와프 협정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사전에 조정국을 결정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통화 스와프 협정이 발동되는 규칙이 확립되어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통화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ASEAN+3 경제 리뷰와 정책대화'라는 역내 시장감시(surveillance) 기구를 CMI의 틀 속에서 통합·강화하였다. 재무장관 대리 회의에서는 동료국가들로부터 상호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상호 감시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다. 더욱이, 상설 감시 기관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도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및 유로권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CMI 하의 통화 스와프 협정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엔(円)을 포함한 동아시아 통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한편, 엔은 원뿐 아니라 동아시아 통화전반에 대해 과대평가되어 왔다.

세계금융위기 동안 한국정부는 원화 가치의 폭락에 대응하여 CMI 하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이용하지 않고 미국과 새로운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CMI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이용되지 않은 데는 CMI 하의 통화 스와프 협정의 'IMF 링크' 조건이 있었다. 'IMF 링크'는 통화위기에 직면하여 CMI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정부는 IMF에 금융지원을 신청하고, 금융지원을 받기 위하여 IMF로부터 지시 받은 이행조건을 받아들여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비로소 CMI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발동되는 것이다. CMI는 현재 총액의 8할의 발동에 대하여 'IMF 링크'를 필수조건으로 결정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을 유효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상적으로 감시를 실시하여 통화위기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통화 위기 발생 시 통화 스와프 협정이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AMRO와 같은 상설감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는 CMI 하에 그러한 상설 감시기관이 설립되어있지 않아 IMF의 감시 및 금융지원 의사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CMI 하 통화 스와프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MF 링크를 철폐하던지, 만약 철폐가 불가능하다면 IMF 링크의 제약과 관련된 금액의 총액에 대한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ASEAN+3 재무대신·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현재의 IMF 딜링크(delink)의 비율을 2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결정되었다. 게다가 일정 조건의 리뷰를 제안함으로써 2014년에는 40%로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IMF 링크를 철폐하게 되면, ASEAN+3의 통화당국은 일상적인 감시를 실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의 발동에 대하여 의사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감시기관으로서 AMRO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내 환율의 조정불량(misalignment) 및 그것을 발생시키는 급속한 자본수출입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AMRO의 운영은 한중일이 협조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RO는 역내 환

율의 동향 및 급속한 자본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해야 하며, 그 기초조건으로서 각국의 정보개시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CMI의 다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한국과 일본을 포함) 규모는 2012년 5월의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총액 1200억 미국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증액되었고, 이와 함께 2005년 5월에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엔·원화 표시의 지불로 30억 미국달러 상당)이 약정되었고, 2007년 7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었다. 단, 2013년 7월 3일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2011년 10월에는 2012년 10월 말까지의 시한조치로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상한을 300억 미국 달러 상당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CMI 하의 통화 스와프 협정(100억 달러)에 더하여 일본재무성과 한국은행 간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한시적인 증액부분에 있어서도 '양국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거시경제의 상황도 건전하다는 인식하에서, 한일 양국은 한일 통화 스와프의 증액 부분의 연장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2012년 10월 31일에 '예정대로 종료'했다.

한국은 2008년 9월 리먼쇼크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심각한 유동성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LIBOR - TB비율의 신용 스프레드에 나타나고 있었던 유동성 부족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통화 스와프 협정과 목적 등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리먼쇼크 직후의 2008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일본은행과 한국은행 간 엔과 원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계속되었다. 세계금융위기 동안 원화의 폭락에 대해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은 이용되지 않았지만, 통화 스와프 협정의 존재 자체로 한국정부 및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도 일본은행이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통화위기 또는 통화의 폭락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할 수 있었다. 또한 통화 스와프 협정은 투기자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보여주는 돈'으로서 사전적인 통화위기 예방의 효과도 있다. 따라서 통화 스와프 협정의 협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여주는 돈'의 효과는 높아진다.

유로권의 재정위기나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상당한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한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CMIM 하에서의 통화 스와프 협정과 함께 한일 양국 간 통화(원·엔) 스와프 협정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거시경제와 은행부문의 건전성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외에도, 급속한 자본수출입의 감시와 한일 양국의 정보 개시 및 공유가 필수적이다.

또한 외환시장이 갖는 상하방 변동의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데 효과가 기대되는 방법으로서 엔·원 외환시장의 창설과 거래규모의 확대를 통한 시장역량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인민폐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엔·인민폐의 외환시장 거래가 한정적이지만 도쿄시장에서도 실시되게 되었다. 인민폐는 자본계정의 교환성은 한정되어있지만, 경상거래에 있어 인민폐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엔·인민폐의 외환시장 거래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엔·인민폐의 외환시장과 함께 엔·원의 외국환 거래 및 외환시장이 한일 양국에 개설되고, 확대되는 것은 지역적 생산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 간의 무역, 직접투자, 자본의 원활한 거래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경제,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공헌할 것이다.

(3) 개발협력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주체가 되어 자조노력에 입각한 건전한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적 발전의 장애가 되는 시장실패 및 미발달을 보완하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통상정책과 연계하면서 공생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공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동시에 개발격차를 시정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제품 수출을 중심으로 ‘빈곤층에 유리한 성장(pro-poor growth)’을 달성하였는바, 대외지원 하에 공적부문·민간부문·커뮤니티가 일체가 되어 ‘자주적’, ‘자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모델을 이끌어 온 한일 양국은 양국 간 혹은 다국 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인

프라 정비·인적 자본과 인재 육성·기초 기술 수준 향상, 제도 금융 및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직접·간접 정책개입 등 사회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동아시아 발전·경제 협력 모델’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수원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의 길을 걷는 신흥국을 이러한 개발 협력에 참가시켜 ‘남남협력’, ‘삼각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 등 아시아의 신흥 공여국에 대해서도 열린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 협력 이념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한일은 농업주체의 경제에서 제조업생산 등 비농업주체의 경제로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이룩하고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자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더불어,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다양한 인도적 원조·경제원조(특히 공적 차관)을 통해 댐,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경제 인프라 정비를 실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원조 공여국으로서 무상원조 및 기술협조 뿐 아니라 인프라 파이낸스를 위한 차관을 공여해온 현재의 경험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축적·체계화하여 국제공공재로서 ‘동아시아 발전·경제협력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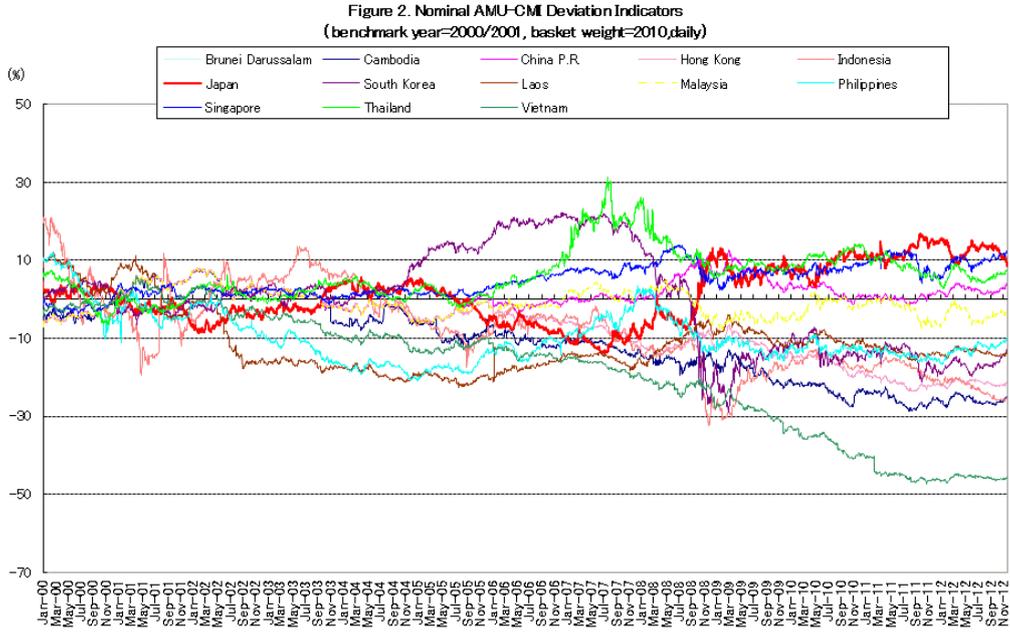
세 번째는 이러한 ‘동아시아 발전·경제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일이다. 한일의 정부개발원조는 역내·역외 개도국으로의 민간 직접투자를 통한 빈곤사감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윤희유’가 되고, 공여국과 수원국 쌍방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조의 역할은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보여준 ‘JAPAN ODA 모델’, ‘원조·투자·수출의 삼위일체론’으로 이미 논의되어 온 것이다. 사실 인재육성, 산업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유효하게 작용해 온 한일의 ODA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특히 자원부문을 중심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및 빈곤층의 시장을 충실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 ‘BOP 비즈니스’ 등의 맥락에서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한일은 세계적 추세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원조협력을 적극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원조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기술을 ‘적정기술’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사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대책이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임산부 및 유아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인데, 일본의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이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을 통해 개발한 ‘오리세트 모기장’ 등의 장기잔효형 살충제 함유의 모기장(LLIN)을 사용하는 것이 말라리아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

한 LLIN의 선진기술은 현재까지 세계의 전염병 대책의 중심 프로그램인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기금'의 활동·실천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술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이 이러한 공익적 사업에 동참한다면 한일협력을 확대하면서 적정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지구적 과제로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전염병의 유행, 재정·금융문제 및 식량·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경제위기, 테러·분쟁 등의 인적 재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재해·위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직격하고 있어서 국제공공재의 공급과 정책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완화책'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지원을 요구한다. 전염병의 유행을 포함한 자연재해 및 식량가격의 급변이라는 경제 위기, 분쟁 등 인적 재해에 있어서는 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재·가격 안정화 기금 및 분쟁 해결 기구 등 국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화와 함께, 재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처를 위해 인적자원·자금·물자의 긴급지원·재해보험기금 등의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대승적으로 이러한 지구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발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빈곤문제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조노력에 입각한 건전한 발전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개발협력에서 투명성 확보·정책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에 관하여 2010년 OECD의 DAC멤버가 된 한국은 동아시아적인 발전·원조의 경험을 살려 DAC의 규칙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한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비DAC 신흥 공여국을 DAC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규칙 제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일은 이러한 개발정책에 대한 규칙 제정이라는 국제공공재의 제공에도 공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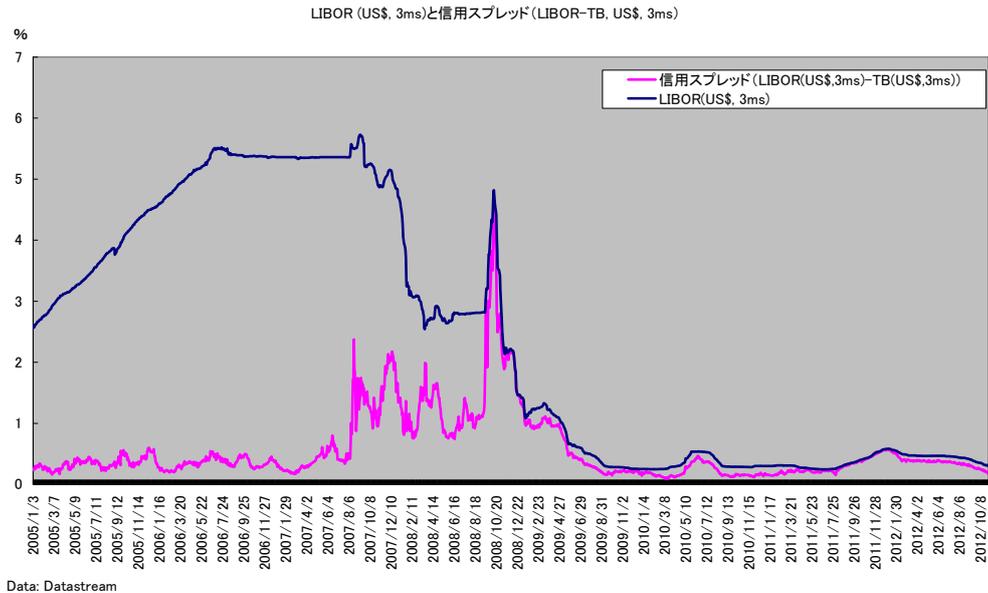
[그림 1] 명목 AMU 괴리 지표의 동향



Source: <http://www.rieti.go.jp/users/amu/index.html#figures>

※ 명목AMU괴리지표는 CMIM의 자원총액에 대한 각국의 공헌액의 비율을 바스켓 쉐어로 하고, ASEAN+한중일홍콩의 통화의 가중평균치를 아시아통화단위(AMU)로 하여 2000~2001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LIBOR와 신용 플레이트(LIBOR - TB비율)



Ⅶ. 복합 공생 기술협력

1. 머리말

경제협력으로서의 기술협력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남북형’ 협력과 기초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간의 ‘북북형’ 협력, 그리고 순수한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등 다양한 패턴이 존재한다. 그 동안 한일 간의 기술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의한 ‘남북형’에서 시작되어 직접투자와 기술의 스피로버라는 민간협력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한국의 기초연구력 강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따라 민간 차원의 협력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고, 향후에는 쌍방의 산관학 체제 정비와 ‘북북형’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 전환 속의 한일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논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간에 기초연구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상호 간의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에 있어 산관학 연구개발 체제는 상호 보완과 협력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정비되어 온 측면이 크다.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경우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세계적인 조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이 기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의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협력체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실제 문제로서 한일 경제는 근소한 시차를 두면서도 자원·에너지 소국이라는 사실에 더하여, 저출산·고령화, 서비스화의 진행, 이노베이션에 의한 성장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 등에서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은 FTA 등을 통한 시장통합을 서둘러 진행하여 통합된 시장을 제3국이나 지역에 대해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한일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제도 확충 등 시

장 확장적인(market-enhancing) 제도가 필요하다. 기술협력의 효과는 국가차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 정비에 의한 유력기업 차원의 협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최대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협력은 국가경쟁력에 직결됨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사활적 이익과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력 공간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넷째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등에 대해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협력적 발상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이미 동아시아,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각각 경제협력, 기술협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일정한 분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장에서는 남북형 경제협력 시대의 성과와 자산을 제3국이나 지역과 공유하면서 상호 분담과 보완적 협력을 통해 원조 효율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 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있거나 정책제안이 가능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한일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협력, 민간 기술협력을 촉발할 수 있는 정부 간 대형 기술협력 프로젝트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한일 기술협력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술개발과 표준화 및 보급 노력에 있어 글로벌한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점차 필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만을 고려하더라도 한일 양국 간의 협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에 있어서는 애플과 구글 등을 중심으로 하는 ICT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면 적어도 향후 5년 이상은 여전히 미국이 기술과 산업트렌드를 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존재감도 강화되겠지만, 미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한일 ICT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대응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기술표준, 외부성이 큰 환경기술 등 지식과 기술은 태생적으로 보편적 속성을 갖는 글로벌 이슈에 속하므로, 항상 글로벌한 경쟁과 협력을 고려하면서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기술지식질서에 대항하여 독자 기술규격의 세계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자주적 혁신'(自主创新)을 슬로건

으로 내걸고, 독자기술의 육성, 독자규격의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이동통신 기술규격을 비롯하여 ICT관련 독자 표준 규격의 책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규모를 지렛대로 한 중국의 ‘갈라파고스 대륙화’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지적재산 보호와 무리한 기술정보 개시 압력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일 기술협력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함에 앞서 언급한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단선적인 기술협력 패턴을 채택하지 않고 현안에 따라 협력패턴을 복선화 하는 협력패턴의 복합화라는 시점이 필요하다.

2. 한일 정부 간 연구개발협력의 주요 과제

한일 정부 간 연구개발협력을 고려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연구개발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를 추출하고,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호 보완성이 있는 분야나 협력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공동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성장이나 국가존립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협력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연구개발협력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국제 경쟁과 협력의 장에서 자국의 기술방식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상호 지원하는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한일 공동표준을 설정하고 세계표준을 지향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고, 향후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나아가 한일 연구개발 협력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초기술, 시스템 및 장비, 단말 등의 공동 개발 및 표준화를 전제로 한일 간의 협력을 넘어 ‘과제달성형’ 처방전의 제3국 공동 수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현시점에서 한일 정부 간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복잡

한 이해관계가 현재화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재적 속성을 갖는 제도적 환경 정비를 시발점으로 해서 양국이 공히 직면한 중요과제, 미래성장동력 기술분야로 협력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럽의 산관학 협력은 시장통합과 역내의 인적 이동 자유화로 인하여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와 EU위원회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유럽의 기술표준과 규제환경을 그대로 세계표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결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산관학 연대체제에 있어 각각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공동 연구 실적이 적고, 공동의 플랫폼을 국제기구나 구미의 연구개발에 대해 의존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다.

연구개발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은 유럽 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국가예산의 규모와 이공계 인재의 절대적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분야에서 [표 5]와 같이 서로 협력을 모색하면서 산관학 연대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의미는 크다.

[표 5] 연구개발분야 한일 협력 사례

| | |
|-------------|--|
| 공동연구 환경의 정비 | 실험시설·기기의 효율적 공동사용, 정보 아카이브의 정비와 공개, 기타 인프라의 상호 이용 등 |
| 인적 교류의 촉진 |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의 교환, 체재 인프라의 정비와 체제요건의 규제완화, 전문자격제도의 공통화와 상호인증, 신진 연구자 지원 등 |
|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정비,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행정당국 간의 교류 등 |

3. 향후의 협력 방향과 사례 검토

(1) 과제 극복형의 사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현재 모든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력 발전, 송전, 배전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다이내믹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새로운 전력공급 방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의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 그리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자원·환경 제약에 대한 대응이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전력시스템과 IT의 융합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콘셉트이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을 신규 교체하는 수준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전력망 공급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하고 유럽연합 내 그리드 접속을 통한 전력거래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장 정전이 적고 송전 로스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전력공급 자체에 대한 신뢰가 동요했고, 원자력발전의 재검토에 의해 절전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대지진 이전에는 일본의 전력업체는 스마트 미터 등을 사용하여 전력수급을 제어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향후 10년 정도는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성장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기회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이 주도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제가 원전사태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2011년 여름의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과 수차례의 원전 부품 고장 등으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그리드 분야 한일협력의 일환으로 전력망 접속이 실현된다면, 불의의 사태로 어느 한쪽에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정전을 피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한일 간 전력계통 연계 협력은 비용 면에서의 과제와 더불어, 협력 시에 발생하는 이익을 개별 이해관계자 수준에서 산출할 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회사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일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전력의 안정 공급이라는 목적은 우선 공유할 수 있으며, 한국이 전력 가격체계의 왜곡을 시정하여 일본과 보조를 맞추게 되면 전력수요 피크의 불일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계통연계가 양국에게 호혜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는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등 풀기 어려운 현안에 발이 묶여 있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전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점차 전력계통(아키텍처)의 표준화, 장비·설비의 표준화 등 전력망의 국제표준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고, 미들웨어는 IT기반으로 전력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다른 나라의 발전소 전력망을 동시에 계통 연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전제가 된다. 현재 한일 간에는 아직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통 연계와 장비·설비 등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그리드 영역에서 한일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세부 사례로는 [표 6]과 같은 것이 제안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 스마트 그리드 영역 한일 협력 사례

| | |
|--------------|---|
| R&D 분야 | 스마트 그리드에 필수적인 전력저장기술 |
| 송배전 분야(계통연계) | 한일그리드접속(=전력의 상호용통) |
| 재생 분야 | 한일 해상풍력단지(Offshore Wind Farm) 조성 (일본-기술, 한국-운영) |
| 설비 분야 | 전기차(충전 인프라), 전기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검침인프라(AMI),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

스마트 그리드의 설비, 장비의 공동 표준화에서는 비용절감 및 해외사업 기반의 확장이 가능하므로 공동의 이익이 기대된다. 시장의 확대와 공급자 납품선의 다변화로 안정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시스템 설계회사, 설비 제조사 등의 컨소시엄이 형성되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양국이 공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전력 그 자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적 시스템을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그러한 시스템 및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듈, 소프트웨어, 시설·장비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한일이 앞서 고령화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사회를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방어나 생태계 유지 등이 이러한 유형에 포함될 것이다.

(2) 성장기반의 공유를 위한 사례:

제4세대 이후(Beyond 4G) 이동통신 분야의 R&D 및 표준화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존재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향후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제조업에서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분야를 창출, 육성하고 아시아, 나아가 세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산업기반의 창출을 위해 공통 파급효과가 큰 기반적 영역에서 최첨단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전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창출과 함께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의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신뢰성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실현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표준화는 표준부재로 인한 비용 삭감, 기술 발전은 물론 산업·경제적 이익,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된다. 이 때문에 표준의 설정은 일국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 및 지역 간 경쟁을 염두에 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컸다. 표준화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른 표준을 선택한 단체, 국가, 지역은 표준변경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진화 과정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술 표준을 놓고 벌어진 기업 간의 경쟁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쟁력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3대 강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2세대(2G) 이동통신 표준경쟁이며, 여기에 제3세대(3G), 제4세대(4G) 이동통신에서 중국 변수가 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동통신 산업의 경우 표준설정 과정에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보다 공식적 표준의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전 산업의 표준이 주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 표준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 간, 기업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이 컨센서스 표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실제로 이동통신 산업의 표준은 시스템, 단말, 서비스, 네트워크 등 수많은

기술영역에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조정을 통해 표준이 설정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글로벌 단일 표준을 추구하기보다는 국가와 개별기업의 단순한 구분을 넘어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결합한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되고 이를 주도하는 기업이 각자의 제공·거래 네트워크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는 생태계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표준에 대한 의사 결정에도 여러 기술의 진화 방향성을 염두에 둔 유연성과 검증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표준기관이 복수의 표준을 인정하는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국제표준의 선택에 있어서도 시장 경쟁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표준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부 간 표준협력회의와 표준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3국 정부 간 협력의 성과가 2002년 이후 장관급 회의로 격상되는 결실을 맺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중일 ICT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그 가운데 차세대 이동통신분야 표준협력의 강화는 줄곧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왔으며,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에 특화한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가 한중일 우호증진 및 동아시아발 정보통신 국제표준 설정을 위한 협력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 간 표준의 상위는 각국이 과거에 채용한 기술규격의 차이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통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산업 발전 및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편익이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시장통합 또는 공동체 구상을 논의한다고 할 때에는 기술표준의 문제를 피해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향후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기술무역 장벽 해소 및 3국 간 무역 촉진 방안으로 한중일 기술표준 협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세대(2G) 이동통신에서는 한중일이 세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제3세대(3G)와 제4세대(4G)에서는 지배표준으로 유럽발 표준(W-CDMA, LTE)이 공통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중국이 독자 표준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의 경우와 같은 통일을 지향한 제도적 노력에 뚜렷한 결과는 아직 없다. 그렇지만 향후 제4

세대 이후(Beyond 4G)의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진화에 따른 하드웨어 공통화의 가능성 증대를 배경으로 최첨단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보급되어 있는 일본, 세계적인 부품 및 완성품 제조업체를 보유한 한국,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시장 중국이 기술 규격에 있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형 표준 생태계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단일표준에 전력투구 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향후 보급이 예상되는 고속 이동통신 기술규격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발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정치적인 냉각관계 하에서도 정보통신분야 기술표준 및 정책 차원에서는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체의 아키텍처 건축을 지향해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통신분야에서의 공동체는 결코 동아시아의 범주에서 자기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유럽발 GSM, LTE의 사례처럼 개방성과 세계적인 확산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연구개발 및 표준화 협력에 있어서는 앞에서 거론한 이동통신분야의 제4세대 이후(Beyond 4G) 기술 이외에도 신뢰성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현재의 인터넷(QoS, 보안 등의 문제)을 대체할 미래 네트워크(future network) 분야 등도 유망하다.

(3) 과학기술 신영역 개척을 위한 사례: 위성항법시스템 분야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가야 하는 연구개발과제가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은 이를 국가존립의 기반에 관련된 연구개발로 자리매김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의 한일협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주수송이나 위성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술,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기술, 나아가 차세대 원자로 등 원자력에 관한 기술, 핵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중요 과제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 개개의 기업만으로는 연구개발투자가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한일 공동연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

키고, 동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안보와 경제·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독자적인 측위위성 시스템의 중요성과 장래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와 유사하지만 독자 기술로 추진 및 운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실증실험중인 EU의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일명 Galileo Project)에 이어 중국도 COMPASS(Compass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제·산업 발전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이다. 측위정보는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통물류 분야 등 국가 인프라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위치 기반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GPS 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막대하며, 사회 인프라의 기초를 전적으로 GPS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극복하려는 것이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배경에는 향후 수신단말이나 관련기기, 정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세계 위성항법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다.

준천정위성 시스템(QZSS: Quasi Zenith Satellite System, 準天頂衛星)은 일본이 추진하는 지역 측위위성 시스템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 QZSS는 기존의 GPS를 보완,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 보완기능은 GPS의 가시 위성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측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보강기능은 서브미터급이나 센티미터급의 고정도 측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국가인프라인 QZSS를 우주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GPS에 비해 더욱 우수하고 정밀한 위성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일이 협력을 통해 고정도 측위정보 활용기술을 개발한다면 도심빌딩이 밀집해 있는 양국에서 GPS를 보완, 보강하는 형태로 보다 우수하고 정밀한 위성항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와 기타 개발도상국 방재분야에의 활용, 무인 농사작업, 교통물류 등 인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일이 추진하는 것은 공공재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지역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협력이 될 것이다.

4. 향후 한일 기술협력의 추진방향

한일경제관계는 경합과 협조가 혼재하는 관계로 발전해왔으며 향후에도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통해 양국의 시장통합의 정도도 강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 각각의 기초연구능력의 향상을 배경으로 기초기술의 공동개발과 같은 선진국 간 '북북형'의 기술협력 사례 또한 증가할 것이다.

종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공여하는 입장이었지만, 향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흥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개방기술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우선은 한일이 정비하는 것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차원의 한일기술협력의 가일층의 발전에는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한일기업 간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분야의 국제적 분쟁이 빈발하고 또한 대규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유럽 등에서처럼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북북형' 한일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와 높은 수준의 보호 제공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적재산권의 정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력하여 제도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적자원의 이동과 각종 자격의 공통화 등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 본격적으로 원조국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한일 모두 후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간 경제협력이나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일 양국은 동아시아와 후발국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생활의 질 향상) 해결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한일이 갖는 남북형 경제협력시대의 공유자산, 예를 들어 경제계획의 수립과 능력 배양 (capacity building)에 대한 개념, 인프라 정비와 그 보수·유지·운용, 환경대응, BHN(basic human needs)의 밸런스, 글로벌화에 적합한 광의의 산업정책 입안 등과 관련하여 공여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신흥시장이 중시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인프라 안건의 수주 등 상업주의에 의해 경합 또한 표면화되고 있어 귀중한 공유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쟁과 협조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공공재 제공형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공체험의 공유를 통한 한일 자신을 위한 신뢰 구축 프로세스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그 자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신시대 공동연구위원 명단

한국위원

| | | |
|------|-----|------------------------------------|
| 위원장 | 하영선 |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 간사 |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연구위원 | 김기석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김양희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 김웅희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
| ” | 김호섭 |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 ” | 문흥호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 | 박영준 | 국방대학교 교수 |
| ” | 박철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 | 손 열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 | 윤덕민 | 국립외교원 원장 |
| ” | 이숙종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
| ” | 장제국 | 동서대학교 총장 |
| ” | 전재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 | 전진호 |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 | 홍종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일본위원

| | | |
|------|--------|----------------------|
| 위원장 | 小此木 政夫 | 九州大学特任教授・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
| 간사 | 西野 純也 | 慶應義塾大学法学部准教授 |
| 연구위원 | 小川 英治 | 一橋大学大学院商学研究科教授 |
| ” | 木村 福成 | 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教授 |
| ” | 國分 良成 | 防衛大学校長 |
| ” | 小針 進 | 静岡県立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 |
| ” | 児矢野 マリ |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
| ” | 澤田 康幸 | 東京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教授 |
| ” | 添谷 芳秀 |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
| ” | 田所 昌幸 | 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
| ” | 中西 寛 | 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
| ” | 長岡 貞男 | 一橋大学イノベーション研究センター教授 |
| ” | 平岩 俊司 | 関西学院大学国際学部教授 |
| ” | 深川 由起子 |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術院教授 |
| ” | 村田 晃嗣 | 同志社大学学長 |
| ” | 薬師寺 泰蔵 | 公益財団法人世界平和研究所理事・研究顧問 |